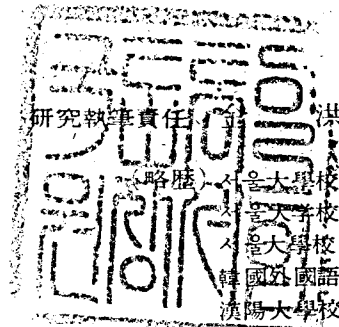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 - 統一政策

韓半島를 圍繞한 極東에 있어서의 軍事安定化 方案



研究執筆責任 洪 喆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 卒業 (1957)
 서울大學校 大學院 卒業 (1959)
 서울大學校 文理大 講師 (1960~1974)
 韓國外國語大學 教授 (1963~1965)
 漢陽大學校 法政大學 教授 (1972年~現在)
 韓國軍事問題研究所 所長 (1973年~現在)
 漢陽大學校 附設蘇聯問題研究室長 (1976. 10~現在)

刊行責任 金 諄 教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一. 研究目的 - 問題意識에 대하여	1
二. 現代的 安保概念과 韓國安保問題	7
1. 現代的 安保觀 · 安保政策의 特徵	9
2. 冷戰的 集團安保類型	15
3. 協力的 共存時代의 集團安保類型	20
4. 韓國安全保障의 對內外與件	26
三. 美 · 蘇 · 中 · 日의 基本世界戰略과 對韓半島政策	29
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31
2.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41
3.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46
4. 日本의 軍備政策과 對韓半島政策	52
四. 韓半島長期軍事安定化方案의 前提條件	57
1. 南北對話의 基本性格把握問題	59
2. 6. 23 宣言과 南北韓關係	62
3. 韓國的 戰略概念樹立方向	65
4. 長期軍事安定을 爲한 戰略概念 樹立上의 當面政策課題들	73

五. 韓半島 戰爭狀態 終結의 制度化問題	81
- 極東의 軍事安定과 平和建設을 爲한 第1段階措置로서 -	83
1. 南北韓 軍事關係의 本質的 狀況 判斷	83
가. 北韓의 軍事政策基調	83
나. 韓國의 戰力構造改編上的 諸問題	88
2. 南北韓 戰爭狀態 終結措置의 意味賦與	94
3. 平和協定締結上的 原則과 前提的 要件들	97
六. 極東地域의 軍事長期安定化 方案으로서의 南北韓軍備協商	101
(軍縮) 問題	
1. 現代的 軍事力(概念)의 類型區分	106
2. 南北韓間의 軍備縮少協商方案	110
- 必要性・問題點・接近方法 등 -	
七. 論文概要 - 結論에 代하여	127

一. 研究目的 - 問題意識에 대하여

一. 研究目的 - 問題意識에 代하여

아시아는 現今의 世界政治・戰略的 環境속에 있으며 韓半島는 아시아의 政治・經濟・軍事・外交上의 環境・與件속에 存立한다. 그리고 韓國은 韓半島속에 存在한다. 故로 韓半島와 韓國은 共히 「世界政治・經濟・軍事・外交的 環境」속에 位置함을 뜻한다. 特히 韓半島는 分斷된 狀態에서 南北韓이라는 두개의 異質的 政權秩序가 對立競爭해온 環境・與件이다.

韓半島의 分斷은 戰後 世界政治 - 強大國 政治 - 의 副產物인 만큼 主要強大國들이 主役活動하는 國際政治上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紛爭地域으로서의 運命을 쉽게 脫皮할 수 없는 戰後의 쓰라린 韓民族史를 겪어오게 했다. 말하자면 國際政治上의 狀況變化에 따라서 韓半島의 存在樣態를 條件賦與했고 韓國의 世界政治的 位置가 決定된 셈이다.

他律的 條件에 依하여 分斷狀態를 強要 當해온 單一民族으로서의 韓民族은 統一의 念願을 버리지 못한채 四半世紀의 分斷史를 經驗해 왔다. 그 동안 異質的인 政治이데올로기上的 對決競爭과 더불어 政治體制上的 相互 異質的 成長史는 結果的으로 民族愁의 「念願」과는 아랑곳 없이 하나의 異質的인 政治實體 單位로서의 異質政權史의 極限的 對決을 助長해 왔으며 「現實」로서는 南北韓 國民間의 敵對概念의 치열한 上昇作用을 加增해 왔을 뿐이다.

韓國戰爭의 動因은 其矣 戰後 世界強大國 政治鬭爭의 폭발사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戰爭은 南北韓國民의 敵對感情

即 國民的 敵對意識을 高潮시켜준 韓·民族史의 悲劇이라 할 수 있다. 緊張은 漸增하고 對話는 斷絶되고 軍事的 競爭狀態는 누구를 질 줄 몰랐으며 韓半島 韓民族의 運命은 백척간두에서 國際政治의 風波에 휘날리고 시달리는 苦痛을 累積해 왔다. 그 苦痛스러운 世界政治 秩序속의 經歷은 이른바 冷戰體制 로부터 始發하여 오늘날의 平和共存時代에로 옮겨오는 동안에 不斷히 겪어본 힘겨운 點綴이었다.

그런데 70年代에 접어들면서 世界政治上的 諸般狀況이 急激한 變動을 招來했다. 韓半島도 自然히 그 變動의 물결 속에 뛰어들었다. 世界속의 韓國이요 韓半島인 만큼 世界情勢變動의 推進力과 急流를 外面할 길이 없는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世界政治의 意味의 政治·經濟·軍事·外交上的 變動의 急流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 急流는 「協力的 平和共存」이라는 堤防을 따라 물결치고 있다. 이 「堤防」은 強大國들의 世界戰略目標達成을 爲한 實踐課業名分으로 作用하며 물결의 흐름을 誘導하고 統制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主要強大國들이 世界政治·戰略運用의 堤防쌓는 作業의 正確한 方向感覺을 捕捉하여 狀況判斷함으로써 韓國이 取하여야 할 實踐路線을 定立하는 일이 韓國民의 共通된 當面課題요 責務이다. 特히 當面課題 解決의 가장 重要한 事案은 世界情勢變動의 全般的 推移에 現實的으로 適應하면서 如何히 하면 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策을 圖謀·具現할 수 있느냐에 集約된다. 따라서 이 論文의 研究目的은 먼저 世界政治·戰略變動의 決定的 基本動因

을 剔扶하고 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策을 講究하기 爲하여 韓國의 軍事的 位置意識을 明白히 把握하는데 集中할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의 安全保障政策構想 및 長久化現象을 露呈하고 있는 統一政策에의 長期對策樹立과 實施에 基礎研究가 되고 또 그 方面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한다.



二. 現代的「安保概念」與韓國安保問題

二. 現代的安保概念과 韓國安保問題

1. 現代的 安保觀·安保政策의 特徵 - 韓國과 韓半島는 世界戰略的 環境動向속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周辺強大國의 世界政治動向 및 世界目標達成의 主要施策이 韓半島에 민감하게 反映되며 作用한다는 뜻이 된다. 때문에 現代的 時代背景·感覺속에 通行하는 安保觀 乃至는 安保政策의 一般的 特徵을 檢證해 보는 것은 韓國의 安保問題라 韓半島의 安全保障體制를 構想하고 모색하는데 重要한 政策考慮事項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1972年8월에 美國議회의 下院外務委員會所屬「國家安保政策 및 科學發展分科委員會」는 世界情勢變動에 步調를 맞추기 爲한 美國의 「國家安全保障政策」에 關한 證詞聽聞錄을 公刊했다.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the Changing World power Alignment: Hearing-Symposium before the Subcommittee on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Scientific Developments of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ouse of Representatives, 92nd Congress, Second Session, May-June-August, 1972. 그 內容을 추려보면 美國이 取하는 現代的 安保政策方向과 安保概念定立上的 主要 關心과 對象領域이 무엇인가를 아는데 많은 參考가 된다. 무엇보다 먼저 「美國의 立場」에서 본 世界情勢動向判斷을 바탕으로 하여 그 情勢變化에 對應해서 美國이 取하여야 할 「戰略的 및 一般的 考慮事項을 檢討하고 具體로는 「軍事力을 背景으로 하는 國家安保政策」을 拳論했다.

셋째번에서는 「國家安全保障의 經濟的 側面」이 다루어졌으며 다음은 「第3世界의 事變發展」에 따른 諸般 試驗과 挑戰과 展望事를 取扱하고 있으며 다섯번째에서 「成功的인 國家安保政策의 國內的 要請事項」이 무엇인가를 가려내고 마지막으로 「第3次大戰을 防止 하기 爲한 實踐使命과 代案」을 定立하는 일에 重點 두었고 「國務省의 見解」를 收錄해 두었다.

以上에서 볼때 現代의 國家安保問題는 國內政治・對外國係問題의 事項別 限界区分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對內問題와 對外問題를 혼연일치된 次元에서 相互關聯直結시켜 政策考慮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同時에 政治的・經濟的・軍事的 그리고 外交的인 諸般事項이 相互密接한 關係를 맺고 總體的으로 묶이고 서로 균형잡힌 政策實施를 하는 것이 一國의 健全한 國家安全保障政策이 될 수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國家安保란 本質的으로는 個別國家의 獨立事業이며 獨自의 政策任務이기는 하지만 大小國을 莫論하고 現代의 國家安保事業을 遂行하기 爲한 安保觀의 定立이나 安保政策樹立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集約된 通念을 配慮・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卽 國家 安保는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家存在의 威信을 높이고 남이 감히 알잡아 볼 수 없는 國民的 諸般力량을 育成強化保全하므로써 自我保存의 最大安全策을 圖謀하는 國家事業인데 이 일을 具體的으로 責任지고 遂行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政府(政權)의 으뜸가는 實踐課業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一國의 安保問題는 종종 「安全保障政策」(national security policy)으로 集約表現하는

것이 善惡이다. 그러니까 國家安保를 「政策」의 次元에서 볼때 그것은 政府(政權)의 實踐意志를 말해 주는 것이다. 標榜設定된 國家의 至高한 目標達成을 爲해 定해진 基本國策을 實施하며 同時에 어떠한 逆境에 處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만한의 態勢를 未리미리 잘 갖추어 놓는 일인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 取해 약할 政策態度는 當時代에 通行하는 通念과 時代感覺을 勘案하여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 不可能한 것을 민감하게 가려내고 狀況判斷하여 國內外的 與件動向에 現實接近的 方法으로 対応措置에 나가는 作業을 安保政策의 生命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現代의 國家安保問題는 特히 群小國의 立場에서 볼때 밖으로는 對外關係(外交政策活動)調整의 柔軟性(flexibility)을 強調하게 되는 것이며 안으로는 우선 國民의 日常生活이 고르고 太平하게 營爲될 수 있는 諸般與件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健全한 安保政策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政治·經濟·軍事外交等 諸般 施策이 總體的으로 均衡있게 動員·投入되고 推進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國民의 安保觀과 政府의 實踐努力이 一體感을 形成했을때 비로소 國家安保는 強力하고 健全하게 存立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家安保란 本質的으로 一國의이며 個別的이다. 적어도 理論上 美國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일수 없고 日本의 安保問題가 韓國의 安保와 一致될 수는 없다. 그러나 現代의 國際政治 或은 國際關係속의 狀況下에서는 各樣 陣營政治라든지 或은 集團의 安保體制의 成立契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同防衛」라는 國際政治化된 共同名分에 依하여 「一國의」意味의 安保概念이 「集團의」意味

의 안보概念으로 擴大解釋되고 實踐運用되는 事例가 許多하다.

이것이 現代的 安保觀 定立의 核心的 政策考慮事項이며 特徵이기도 하다. 要컨대 安保概念의 「個別的」本質·性格이 特定 國際社會集團國家間에 通用되는 「集團的」乃至는 普遍的 性格에 吸收되고 마는 것이다. 이 경우 國際政治의 生態에서 볼 때 一國의 安保問題가 世界的·集團的 安保體制의 스타일을 決定해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一國의·個別的 安保問題는 世界的·集團的 安保體制의 存在樣態에 依해서 決定的으로 영향받는 경우가 있다.

前者를 強大國型 安保政策이라 한다면 後者は 群小弱國 一般의 安保政策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第2次世界大戰以後의 流行을 볼 때 特히 群小國의 安保問題는 大概의 경우 「集團的 安保體制」에 依해 「保障」돼 왔다는 事實도 重要視할 必要가 있다. 集團安保는 障營的 規模의 措置도 있고 地域的 規模의 集團安保措置도 있다. 이같은 集團安保措置가 究境은 超強大國으로 看做되는 美蘇兩國을 頂點으로 한 兩極的 安保體制의 對決秩序로 歸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集團安保體制」에 依해서 各障營所屬의 管屬國家 및 障營全體의 安全을 保障받는 措置이였다.

一國의 單位의 國家安保問題는 언제나 相對的이기 때문에 現實敵國 或은 假想 敵國의 存在를 前提로 하게 되며 敵概念의 強度如何에 따라서 安保政策態度의 比重이 決定되는 것이다. 따라서 障營的이거나 地域的이거나 간에 集團安保의 경우도 相對的인 意味의 敵概念의 強度 即 相對方敵으로 부터 받는 威脅度의 強弱度에 依

하여 集團安保의 方向感覺과 態勢整備과 政策의 樣態가 規制되는 것이 事實이다. 一國의 (個別的) 集團의 어느쪽이든지 敵概念 即 敵對感情, 對決意識이 強力히 作用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安保政策에 있어서 「軍事力」 爲主의 重點安保施策을 圖謀하는 것이 常例이다. 이 軍事的 方法의 安保政策重點主義를 取하는 政策競爭에 있어서는 軍事法則上의 「兩極化現象」을 自招하게 되어 그야말로 平和를 爲하여도 軍事力으로 이를 保障해야 한다는 時代感覺을 낳게 하는 것이다. 冷戰時代의 安保政策類型은 이에 屬하는 事例이다.

지금은 脫冷戰體制를 爲해 많은 努力이 試圖되는 마당에 있다. 平和共存時代에로의 突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萬若에 一困의 意味에 있어서나 世界政治的 意味의 狀況變動推勢에 있어서 敵概念, 극한적 對決의식이 鈍化現象을 招來했다면, 自然히 安保概念, 安保政策의 類型도 軍事的 方法 以外의 어떤 合理的인 形態로 變貌하게 마련인데 그것은 自動적으로 國家安保를 爲한 軍事力의 活用方法도 變化된 對內, 外狀況에 適合할 수 있도록 性格規制를 再調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爲하여는 우선적으로 平和의 共存時代에 副應한 「戰略概念」의 再定立調整이며, 其他 建軍政策, 武器體系, 軍事敎理, 勳員體制에도 위와같은 基本政策方向이 反映되어야 하는 것이다. 要컨대 軍事的 方法에 依한 安保對策 重點主義가 일단 「非現實的」이라는 狀況變化로 浮刻했을 때는 非軍事的 方法 即 政治的, 經濟的, 外交的 諸方面에 걸친 均衡있는

안보政策을 構想하고 實施하는 것이 가장 「現實的代案」이라 할 수 있다.

韓國의 安檢問題, 그리고 「아시아集團安檢」問題가 世界政治上의 重要한 關心을 끌고 있는 現時點의 世界政治動向의 全般의 狀況與件은 必로 「非軍事的方法」에 依한 個別的, 集團的安檢體制를 構築해야 한다는 方向으로 移되고 있다. 이와같은 國際政治潮流와 時代背景속에서 韓半島가 孤獨하지 않으려면 南北韓은 共に 過去와 같은 安檢政策基調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安檢政策概念과 姿勢 定立을 爲해 自己變貌의 努力이 集中될 것을 要請받고 있다.

2. 冷戰的 集團安保類型 戰后의 世界政治史는 크게 두개로 分割된다. 첫째는 冷戰體制이고 둘째는 平和共存秩序이다.

冷戰史的 集團安保體制 形成의 動機賦與는 政治的, 軍事의 側面에서 重點的으로 考察할 수 있다. 政治的 動機賦與를 먼저 보자, 美蘇를 頂點으로하는 兩極陣營政治의 形成過程은 切열한 政治 이데올로기 戰爭으로 부터 始發한다. 民主共產 두 이데올로기는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라도 같이 對決意識의 씨를 깊이 뿌리박게 했고 따라서 陣營間의 敵概念은 가장 切열한 強硬表示로 나타났으며 宣戰 布告없는 戰爭狀態(冷戰)를 지속하게 했다.

2천 4백만의 人命犠牲을 強要받은 나치스獨逸과와 大戰을 차루고 聯合軍과 더불어 戰勝한 스탈린은 終戰과 同時에 共產圈의 最高支柱, 盟主役割을 擔當하면서 所謂 蘇聯圈, 陣營形成을 爲한 「鐵의 帳幕」을 치게 된다. 對西方世界과의 對決姿勢를 定立하면서 封鎖政策을 되나갔다.

相對的으로 西方世界도 對蘇政策를 가다듬는 聲援과 具體的 措置가 取해지는 것이 46年 부터이다. 美國을 訪問했던 윈스턴, 처칠卿이 反蘇, 反共路線形成의 切實緊迫함을 力說한 것이 46年이며 蘇聯圈諸國의 封鎖性을 非難하는 한편, 美英兩國은 「兄弟的結合」으로 安保體制確立으로 呼訴한바 있다. 이當時, 駐蘇大使를 歷任했던 케네디가 「對蘇封鎖政策」論을 편 것은 周知하는 바이다.

47년에는 美國이 「트루만, 두트린」을 宣言하므로써 對蘇基本外交政策路係을 確定해나갔다. 이와같이 美國圈, 蘇聯圈形成의 序圖이

연주되는 가운데 美蘇兩極中心의 陣營政治가 展開되었다. 그리하여 自由民主, 共產主義라는 政治이데올로기를 각己 自己陣營의 守護神으로 내세워 世界政治勢力을 두 派로 分割하여 結束시켜 갔다. 이 때문에 美蘇兩國은 世界의 많은 國家集團들을 되도록 많이 「自己편」에 끌어 들이려는 경쟁적 策勵에 골몰하게 되고, 群小國들은 美蘇 어느 한쪽에든지 달려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美蘇의 어느 一方에든지 依宅을 해야만 生存과 安全이 圖謀되는 現實이 었다. 所屬陣營의 政治名分—民主主義이든 共產主義이든—을 받아들여야만 群小個別國家의 政權秩序는 維持, 安定할 수 있는 集團保障을 받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政治武器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무엇보다 強調하게 되고 自己武装도 強化하는 手段으로 삼았다. 自國이 所屬돼 있는 陣營의 共同守護라는 名분에 얽매어 陣營別로 편을 짜서 集團的 防衛政策, 安保體制의 거미줄에 묶이게 하는 책적질을 美蘇는 경쟁했다.

冷戰的 集團安保體制下的 政治的, 動機賦与는 群小國으로 하여금 이데올로기, 戰爭의 어느 一方에 든지 편을 들게 하는에서 公認하였는데 群小國은 所屬最高頂上國家로 부터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 外交的인 安全保障措置를 報償받는 代價로서 그 頂上國家가 이끄는 集團的, 地域的 安保體制秩序에 参与하여 充分的 役割을 해야하고 때로는 自己犠牲로 甘受해야만 했다.

이와같은 集團的, 地域的 安保體制構策에의 政治的 動機賦与는 自動的으로 現實手段方便인 軍事的 動機賦与를 促進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陣營間的 不信高潮, 對話交流의 斷絶, 不和의 助長으로
 치열한 敵對感情만이 왕성했기 때문에 당장 武力手段行使로 결판
 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限에는 自己保護와 安全保障策의
 가장 現實的 対応策을 軍事實力의 實力增強配備 競争밖에 남는 것
 이 없었다. 그러나 各國이 獨自의 自己能力에 依한 陣營政治가
 要求하는 責任完遂도 不可能했고 一國의인 富國強兵, 軍備競争을
 遂行하기에도 力不足이 있으므로 軍事의인 面에서도 所屬 頂上國
 家로 부터 支援保障없이는 自國의 安保對策은 不可能했다.

그래서 美蘇는 軍事的 支援뿐만 아니라 經濟援助까지 결붙인
 경쟁을 통해 海外基地網 即 陣營所屬個別國家確保作業에 분망했고
 國際責任地域을 擴大하는데 余念이 없었다. 그러는 가운데 陣營
 間的 政治的 對決秩序를 具體적으로 定立하고 安全을 圖謀하기
 爲하여 「集團의 安全保障措置」를 取해갔다. 이같은 安保措置는
 協定締約으로 國家集團을 뭉치게 하므로써 軍事的 불력을 形成했
 으며, 軍事불력=政治불력의 等式을 成立해나갔으며 東西陣營分劃의
 具體的 定界設定을 可能케 하였다.

大体로 50年代를 前後해서 50代 中葉이 되면 汎世界的인 集團
 安保體制構築事業이 일 단락을 보게 되는데 NATO, 와르샤와 條約
 機構, 中東條約機構, 東南亞條約機構, 美, 蘇, 뉴질랜드間的 ANZUS,
 그리고 條約, 協定에 依한 二國間安保體制로서 美, 日, 韓美, 美,
 比, 美, 台灣間的 防衛協定은 모두 美陣營間的 集團安保措置이다.
 蘇, 中共, 蘇, 蒙古, 蘇, 北韓間的 相互防衛協力등은 와르샤와 條約

機構과 더불어 蘇聯의 國際責任 集團安保措置로 出發한 것들이다.

그러는 동안에 原子爆 核武器保有의 拡散과 同時에 일어난 武器革命發展은 結果적으로 冷戰의 集團安保體制 堅持의 政治的, 軍事的 直接試與를 根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核開發은 破壞力の 革命을 갖어왔고, 미사일時代의 運搬手段은 戰略規模의 宇宙化를 招來했다. 陸海空의 大型輸送체제의 등장을 兵站, 空輸, 機動革命을 到來케 했다. 無人軍事偵察機 및 人工諜報衛星은 通信革命을 낳게 했다. 이와 같은 一連의 武器革命은 國際政治秩序의 構造的 變質을 갖어오게 한 直接的 動因이라 할 수 있다. 가공할 파괴력, 核運搬手段, 戰略諜報蒐集革命(人工衛星에 依한 相互監視등) 들은 戰爭論理, 軍事法則의 自己制限, 分裂症을 派生케 했다. 적어도 核大戰爭에 關한한 彼此的 同時的 死戰로 부터 살아남기 爲한 (生存) (SURVIVE) 의 方法模索이 더욱 重要하게 됐다.

그리하여 冷戰論理에 支配된 軍事불력 爲主의 集團安保體制는 例외로 1960年代를 넘어서면서 부터 多方面에 걸쳐 自己變質의 徵兆를 나타내기 始作한다. 그것은 우선 美蘇 兩極化陣營政治로 부터 多極化로의 移行現象을 보게 되는데 때를 같이 하여 冷戰體制를 脫皮하고 새로운 世界秩序形成을 爲한 名分論的 活力素로서 이른바 「平和共存」理論이 抬頭됐다. 그리고 보면 60年代 全般에 걸친 東西陣營의 對立, 競爭相은 70年代 以後의 世界政治戰爭에서 살아남기 爲한 自己保全의 戰略態勢를 整備하는 일에 精力을 쏟아 왔다고 할 수 있다. 70年代 以後는 自然히 集團安保

体制의 스타일도 冷戰的 特徵을 一部分은 버려야 하고 一部分은
修正을 加하지 않으면 안될 現實的 要請에 부딪친 셈이다.
이와같은 狀況變化의 基盤위에 아시아의 集團安保問題와 韓半島의
安全保障問題도 世界政治上的 第一級關心事로서 우리의 目前에 浮
上해 있는 것이다.

3. 協力的 共存時代의 集團安保類型-

韓半島의 安全과 아시아의 集團安保問題도 이 新 時代秩序의 集團安保類型속에 들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確實히 冷戰的 集團安保體制가 支配的이던 때보다 東西間의 敵對意識 乃至는 「敵」 概念이 鈍化돼가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軍事目的 重點主義의 集團安保問題도 政治目的, 經濟實制目的 為主와 集團安保類型으로 變質돼가고 있다. 그런 뜻에서 協力的 平和共存時代의 集團安保問題는 脫冷戰的 새로운 名分을 찾게된 것인데 그것들을 要約해 본다면 軍事불력의 解体實現(海外軍事基地閉鎖, 撤収포함), 世界的推勢인 軍備競爭予算의 節減, 核, 通常軍備縮少를 통한 大小強弱國의 共通된 軍事財政負擔의 排除試圖와, 平和保障 및 安定된 世界國民의 生活福祉增進問題에 集約되고 있다.

이의 實現을 딜받침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集團安保體制를 구축하기 爲하여 提起된 政治的 意味의 動機賦與를 나는 다음과 같이 要領해 본다. 그것은 強大國의 世界戰略目標의 共通指標로 看做되는 것이기 때문에 世界全般에 걸친 狀況變化의 促進劑이기도 하지만 보다 關心을 모아야 할 點은 아시아의 集團安保類型이나 韓半島의 安全保障問題에도 直接的으로 反射作用을 하는 要因이라는 點에서 重要한 것이겠다.

世界戰爭國家들의 第一次目標은 「現狀維持」政策이다. 冷戰史 以來로 尙今 未解決된 世界政治問題들을 우선 現상태대로 當분간 凍結시키자는 것이다. 勿論 이같은 戰略目標設定은 強大國들의 便宜

主義를 現實充足시키기 爲한 첫입에는 틀림이 없다. 어쨌든 이제까지 對決競争 一刃到로 지내온 東西間의 體制共存을 強要하고 있다. 이 事實은 특히 分斷國家群에서 投映되는 「現實」이다.

때문에 分斷國家의 統一問題는 長久化現象을 示現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위와같은 對決現象의 強度를 서서히 줄이기 爲해서는 「緊張緩和」措置가 時急하다는데 焦點을 모으고 있다. 이 말은 특히 군사적 경쟁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긴장완화책을 圖謀하는 가운데 「長期的인 軍事安定策」도 重要的 目標達成의 指標로서 選定해 놓고 있다. 長期的 軍事安定策圖謀는 「互惠의 安保概念」의 導入을 促求하고 있다. 冷戰體制下의 典型的 安保觀 安保概念은 어떤 方式으로든지 相對方의 「安保」를 破壞하고 壓到하고 그리고 我方의 「優位」確保에만 心血을 기울이는 일이 있었다. 이같은 彼此共通의 경쟁의식은 結局 無限定한 軍備競争반을 자극해 갔을 뿐이다. 이제는 크게 보면 東西關係에서 그렇고 좁혀보면 分斷國家群에 이르기까지 彼我的 安保問題가 互惠의 基盤에 立脚한 安定基調를 찾는 일에 보다 진지한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雙務的 或은 集團的인 協定, 合意에 依해서든지 또는 自制에 依해서든지 간에 彼此가 相對方의 安保에 本質的으로 威脅을 助長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安保概念이나 安保政策은 可及的 取하지 말자는 良識을 強調하게 됐다. 이같은 世界的 분위기를 強大國들이 솔선해서 共同的으로 保障하자는 基本諒解를 前提로 「互惠의 安保」와 「互惠의 利益」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勢力均衡」策의 具現에 力點을 두게된 것도 現代的 安保 對策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政策考慮事項이다. 그리하여 이 몇 가지의 骨字를 묶어서 表現한다면 現代的 「安保問題」는 「協力」的 次元의 互惠的 相扶相助가 必要不可欠의 政策基本姿勢로서 提起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동안 韓半島의 安全保障을 爲해 強大國에 依한 「集團安保體制」問題가 時論의 一角을 차지해온 바 있다. 그리고 蘇聯의 브레즈네프」의 發想에 依하여 (69年) 所謂「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이 提起된 바 있고 그후에도 여러차례 기획 있을 때마다 主張되고 強調돼왔다.

다만 아직까지는 「論」이고 「構想」이지 實現段階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論」이든 「構想」이든 或은 부레즈네프가 發想主張했던 또는 너슨이 主唱했던 누가提起했든간에 世界政治, 安保問題의 全般的 構造變化를 감안할 때 上記의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이 強大國들의 世界戰略目標達成을 爲한 共同指標의 一環으로서 公約數를 內在하고 있을 경우에는 名分上으로나 現實적으로나 各國 特別히 아시아諸國은 無關係버릴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万若에 브레즈네프의 構想, 主張과 正反對의 代案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새로운 對決意識을 浮刻시켜 強調해야 할 것이요, 그럴려면 또 다시敵概念의 對象이 明白히 設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을 操作해 내기에는 「協力的 平和共存時代」의 時代感覺을 逆行하는 것이 되어 現存 國際政治秩序運用의 通念, 名分上 이틀러락하지

않고 있다. 勿論 明示的으로 밝히고 있지않는 브레즈네프構想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政治的 底意와 策略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巨視的인 世界平和와 安全의 먼 앞날을 두고 볼때 万若에 어떤 構想이 眞實로 아시아의 集團安保体制構築을 爲해 基礎되고 眞實이 될 수 있다면 世界政治를 即 平和와 安全을 總體的으로 責任지고 있는 強大國이나 아시아의 關係國家政府들은 該構想의 相反表示를 해야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關係強大國은 그들에게 賦課된 國際責任을 다하는 것이고, 아시아의 平和安全을 爭取하는 아시아 國民들 스스로의 前進積極的인 姿勢와 努力을 証明하는 政策態度라 말할 수 있다. 이제 는 既存태은 障營的 對決意識-敵對概念-에서 派生되는바 「蘇聯의 브레즈네프가 主唱하는 構想이기 때문에……」一考의 여지가 없는 臆고래와 같은 것으로 看過해버릴 수 있는 偏見의 時代는 지나가고 있다. 때문에 브레즈네프構想의 眞意를 잘 파악하고 분석검토하고 그리고 實現可能한 方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는 努力은 가치 있는 일이다.

브레즈네프가 集團的 基礎에 立脚한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을 說明하는 바에 따르면 그 本質을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아시아에 있어서 集團安全保障은 國家間의 關係에 있어서 武力行使의 拒否, 主權의 尊重, 國境의 不可侵性, 內政不干涉, 完全한 同權과 互惠原則에 基礎한 經濟 其他面에서의 協力の 広範한 範圍이라는 願望」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構想이

突現될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協力할 用意가 있음」을 되풀이 해왔다. 또 中蘇紛爭對立의 심각성을 念頭에 두면서 中共의 存在를 強力히 意識하는 아시아集團安保體制創設의 構想을 主唱하는 것인데 「아시아集團安全保障體制는 中國도 포함한 모든 國家에 開放된 것이더라……그것은 어떠한 나라, 如何한 國家集團에게도 敵對視하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다짐한바 있다. 그리고 軍事實력, 政治불력의 解消와 軍縮은 安定의 必須條件임을 내세우고 「軍事, 政治 불력과 閉鎖集團의 存在는 緊張의 主要源泉의 하나」라고 指摘했다. 어떠한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創設의 構想主張속에 담겨진 적어도 表現上의 本質은 中共의 周恩來가 55년의 반동會議 以來, 國際外交政治武器로서 効果있게 援用하고 있는 이른바 「平和五原則」과도 本質的으로는 大同小異이다. 다만使用言語의 「意味만이 彼此의 態度, 立場을 正常化하고 有利하게 해석하려는 「立場의 差異」가 있을 뿐이겠다.

現段階로서는 蘇聯이 主唱하는바 中國을 포함한 아시아全體을 하나로 묶어서 集團安保體制를 구축하는 일은 長期的인 目標達成의 一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關聯하여 유럽의 安保를 爲해 蘇聯이 提起해온 「유럽安保會議」의 經過를 눈여겨 볼 必要를 느낀다. 왜냐하면 當初蘇聯은 유럽의 安保를 爲한 「體制」構想을 提起했었다. 그러나 「體制」가 구축 되려면 유럽安保의 「制度化」를 前提하게 되는데 制度化란 적어도 東西間의 協定과 合意없이 는 쉽게 形成되기 힘든 것이었다. 그리하여 合意와 協定段階에로의 推進力

을 結集할 수 있는 母体役割을 담당하게 될 「會議體」의 交渉 範圍을 必要로 하게 됐고 因하여 유럽 安保「體制」構想을 유럽 安保 「會議」로 탈바꿈시켜 西方側이 提案한 「「相互均衡兵力減縮」 (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 MBFR) 案을 並行시켜 外交 活動과 政治妥協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위와같은 유럽 安保問題의 推移動向의 先例를 勘案할 때 아시아의 集團 安保問題도 그것이 「體制化」할 수 있기에는 整備되어야 할 予備作業이 山積해 있다. 차라리 體制化를 促進시키기 위한 實質的段階의 課題解決의 한 方案으로서 「아시아 集團 安保會議」를 組織하고 常設機構化하는 各國의 政策努力, 外交活動展開가 아시아 集團 安保의 體制創設을 促進하는 母体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必要하다고 느껴지는 위와같은 予備的 整地作業과 關聯시켜 한가지 注目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蘇聯이 71年 以來로 取해온 아시아 諸國과의 關係改善패턴의 현저한 변화이다. 즉 「二國間의 條約, 協定」(Bi-lateral bases)을 締結하는 外交政策路線을 펴고 있다는 事實이다. 가령 71年の 蘇印友好協力條約, 72年の 蘇, 이라크友好協力條約 등은 政策 轉換패턴의 代表的 例로 看做할 수 있다 其他, 아시아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는 雙務的 基盤에 立脚한 「協力の 方途를 모색하는 積極적 活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政策構想, 外交活動의 패턴 轉換이나 「傾向」 등은 앞으로 韓半島 安全保障問題에도 直接間接으로 投射될 것임을 充分히 予告해 주고 있다.

4. 韓國安全保障의 對内外与件

韓半島는 아시아 속에 있고 韓國과 北韓은 韓半島内に 아직은 眞實의 體制로서 共存의 基盤을 닦아가는 중에 있다. 體制共存의 「制度化」가 아직은 돼있지 않을 뿐이다.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의 世界戰略目標의 共通分母는 앞에서 要約言及했다. 그와같은 共通分母가 韓半島問題에 現實로서 強力히 作用하고 있는 이마당에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創設構想은 계속적인 時論의 関心對象으로 浮刻해 있다. UN에서도 美蘇關係에서도 蘇日外交에서도 그리고 中蘇紛争속에서도 이 問題될 것이다. 蘇北韓關係에는 反映될 것이며, 앞으로의 韓蘇關係改善方向에도 상당한 比重을 占할 것이다.

此際에 強大國의 世界戰略目標의 共通分母를 勘案하고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體制構想도 考慮하면서 國際的 狀況變化에 實質的으로 適応對処하기 爲한 韓國의 独自の 戰略概念과 現時代感覺에 適宜 副應할 수 있는 安保觀을 確立하여서 韓國 나름대로의 基本政策姿勢를 闡明하고 實踐努力하는 것이 韓國과 韓半島, 그리고 아시아의 全般的인 集團安保를 爲해서 寄与하는 일이며 韓國으로서의 役割이 增進될 것이다. 아시아의 韓半島 安保問題는 그것이 戰后處理問題의 一環이은, 強大國의 國際責任政治의 副産物인 만큼, 結局 強大國의 協力的인 「集團安保措置」가 取해져야만 名실상부한 韓半島安全保障體制가 건전하게 構築될 수 있음을 否認해서는 안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韓半島問題解決과 密接한 關聯을 갖는 周辺強大國間의 「互惠的 安保概念」및 「互惠的 權益保全」을 均衡있게 相互保

障할 수 있는 條件과 기틀이 마련돼야지만 韓半島의 長期的인 軍事安定 即 韓半島安保의 基本關鍵이 해결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上記한 바와 같은 關係主要 強大國들의 個別的 世界戰略目標의 核心이 무엇인가를 點說하고, 그들의 個別的 對韓半島政策態度의 基本方向이 어디에 重点되고 있는가를 要点的으로 整理考察하므르세 앞으로의 韓國의 實現性 있는 독자적 安보정책수립에 參考될 것을 期待한다.



三 美・蘇・中・日の 基本世界戦略과 对韓半島政策

三, 美蘇中日의 基本世界戰略과 對韓半島 政策

1.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은 미국의 세계정책 및 世界戰略目標達成의 一環이며 對象地域이다. 때문에 가령 對韓經濟援助라든가 或은 軍事政策 乃至는 駐韓美軍政策등과 같은 具體的인 對韓政策을 除外한다면 美國의 對韓半島 或은 對韓政策이 個別的인 것으로 獨立돼 있다고는 斷定하기 어려우며, 美國의 世界外交戰略의 基本政策實施의 틀속에 韓半島 或은 韓國이 政策考慮되는 것이다. 勿論美國의 對韓經濟政策 乃至 軍事政策등도 終局的으로는 美國의 對世界外交戰略 基本方向에 依해서 決定돼간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런 뜻에서 美國의 世界外交基本戰略目標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은 美國의 對韓政策 基本方向을 把握하는데 重要한 關鍵이라 할 수 있다.

現在 美國의 對外政策과 世界戰略目標은 닉슨行政府의 實踐路戰에서 찾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닉슨大統領은 지난 73年 5月, 美國의 70年代를 이끌어 나아갈 外交政策 및 世界戰略目標의 基本方向을 提示했다. (cf. - U.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 Shaping A Durable Peace, A report to the Congress, by Richard Nix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y 3, 1973). 그것은 「永統的인 平和建設」

이라는 實踐目標이다. 現今世界에 있어서의 超強大國으로서의 美國은 같은 超強大國의 하나인 蘇聯과 더불어 世界政治運用上의 變軸을 이루는 強力한 實力國家이면서도 世界政治問題 處理作業過程에 있어서는 如前히 美國의 「指導的 役割」을 계속 유지하며 다극적 세계 전략환경속의 世界平和構築을 모색하는 일에 있음을 못박았다. 또 友邦諸國과의 友好關係維持를 堅持하면서 기존해온 대결의 시대를 협상시대로 전환키 爲한 積極的 자세로서 既往의 敵對國과의 現狀維持 및 共存關係 發展을 強調하는 한편 緊張緩和策을 세계 전략목표 달성의 根幹으로 삼겠다는 것을 다짐했다. 이와같은 巨視的인 目標達成을 爲해 그 實踐手段의 가장 効果的인 實力基盤이라 할 수 있는 建軍政策方向設定에 있어서는 「外交活動과 外交交渉을 効果的으로 支援해 줄 수 있는 軍事力을 維持하는 일」이라고 強調했다.

둘째로는 「國內외의 번영과 경제적 안정에 寄與할 수 있는 財政政策」에 重點을 둔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그리하여 닉슨大統領이 這間에 蘇聯과의 「戰略武器制限協定」(SALT)을 締結한 것이라든가 中共과의 關係改善, 越南戰爭, 印支半島問題의 平和的 解決方案定立具現을 實踐해 내바 있고 其他 世界政治問題의 全般的 解決方向을 모색하기 爲하여는 美蘇, 美中, 美日間의 빈번한 頂上會談을 통해 設定된 世界戰略目標實現에 적극적으로 臨해온 바 있다.

뿐만아니라 同盟友邦諸國들의 이른바 「自主防衛態勢整備」를 促求하는 가운데 보다 實質的인 世界防衛, 安全의 責任分担을 強力히 推進해 오기도 했다.

위와같은 美國의 對外政策 基本方向과 世界戰略路線의 標榜實施는 公 NATO 등 集團安保체제의 變質可能性을 提起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安保問題, 中東戰爭의 處理方向, 東南北아시아의 安全保障問題, 海外基地 및 海外駐屯美軍政策등등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動機를 賦與한 셈이고, 나아가서는 韓半島의 앞으로 安全保障問題와도 直結되는 世界戰略의 환경여건조성의 具體的 試圖로 投映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美國은 美國대로 世界超強大國으로서의 모든 體貌를 갖추고 70年代의 보다 確固한 戰略遂行의 基礎作業을 튼튼히 해 나가는 立場에 있으면서 同時에 世界安全의 相互補完의 相扶相助原則을 強調하게 된 것이며, 既往의 受援國들인 友邦諸國들도 美國의 世界戰略目標達成을 成果있게 다할 수 있도록 聲援해 줄 것도 아울러 要求하고 있고 그러기 爲해서는 友邦들 나름대로의 現代世界政治現實에 잘 適應해 나갈 수 있는 戰略目標을 定立해 주는 것이 優先務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래서 各國은 自發적으로 「自主國防態勢」를 構築할 것과 應分의 安全保障 責任分担이 切實하다는 點을 政策으로 發動시키고 있는 중이다.

以上과 같이 美國의 世界戰略態勢基調는 어디까지나 힘을 바탕으로한 超大國으로서의 進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方策講構인 것이며 世界政治體制間의 協力的 共存秩序定立을 爲해 내세워 實踐하는 路線인 것이다. 그 속에는 叙上한 바와 같이 強大國間 世界政治目標의 共通分母라 할 現狀維持, 緊張緩和, 長期的, 軍事安定 및 勢力均衡에 들어 있다는 것은 세삼 되풀이 할 必要는 없다.

다음은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이다. 美國의 戰后의 極東政策은 中國大陸政策, 對日政策, 그리고 對韓政策으로 主軸을 形成했다. 특히 對日, 對韓政策은 蘇聯과 中共의 戰后極東戰略政策에 對應하는 美國의 北太平洋戰略遂行上 不可不의 前方堡壘基地로서의 日本과 韓國을 確保하는데 있었다. 그중에서도 美國의 戰后對日政策에 比하면 對韓政策은 政治的 比重보다는 軍事的 比重을 더욱 力點을 偏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美國의 戰后 北太平洋戰略遂行上의 日本의 역할은 보다 政治的이고 戰略的이며 韓半島의 后方兵站基地라는 點에 重點을 反하여 韓國地域은 韓日美의 戰略線(戰略圈)을 連結하는 最前方 軍事作戰基地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예컨대 1970년에 이르기까지의 위와같은 美國의 對極東政策, 특히 對韓軍事政策의 實績推移에 關해서는 筆者가 다른 체계에 간단히 整理해 본바 있다. (參照-「北韓의 軍事政策路線에 關한 研究」, 研究論叢, 第13號, 1971年 7月, 國際問題研究所刊-非売品 但 無記名)

그리하여, 美國은 韓國은 韓國이 美國의 最前方軍事作戰基地로서의 安定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韓國의 國民生活 即 政治安定의 奠基石인 經濟援助政策과 政治安定속의 軍事基地役割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軍事援助政策을 通過 韓國의 安全保障을 責任 져야만 했다. 그러니까 美國의 戰后 對韓政策의 核心은 經援政策 和 軍援政策으로 集中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對韓 軍事政策 即 軍援政策은 武器, 裝備, 軍事費등으로 크게 分類해 볼 수 있겠

는데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의 總體的 特徵을 銳意分析해 볼것같은
 매우 重要하고도 흥미 있는 事實을 発見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世界政治秩序 全般의 어떤 構造的 變化가
 일어나고 變化된 새로운 事態에 對備하기 爲한 北太平洋戰略概念
 및 戰略展開가 必要하게 될때마다 對韓軍事政策의 方向을 自由自在
 로 便宜調整해 왔다는 事實이다. 둘째로는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은
 蘇聯의 對比韓軍事政策에 相應한 措置를 取하므로써 美蘇間의 直接
 的 軍事競爭, 均衡策圖謀가 試圖돼 왔다는 事實을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은 특징을 가장 구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美國의 韓國에 對한 武器需給政策이라 할 수 있고 蘇聯의
 對北韓主要武器供給實態로서 把握된다. 결들여 北韓에 對한 武器需
 給實態에서는 蘇聯과 中共이 경쟁적立場에서 對北韓武器供給政策을
 써왔다는 點을 看過 해서는 안된다. 가령 1950년부터 1969年
 까지의 美, 蘇, 中共이 各々美國은 韓國에게, 그리고 中, 蘇는 北韓
 에게준 武器需給傾向을 보면 다음 表와 같다. (cf., -The Arms Tr-
 ade with the Third world,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weden, 1971, P, 404: Table 15.1, Patt-
 ern of major weapon supplies to tho Far East, 1950-69):

(表一)

年度 国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美	2	2	2	1	1	2	3	1	3	1	2	1	2	1	1	1	2	1	1	3
蘇	2	2	2	3	1	2	1	1	1	1	1	1	1	1	1	2	3	1	1	
中	2	2		2				2	3	3	2							2		

※ 上記数字에서 1 = 1000万\$ 以下
 2 = 1000万\$ - 5000万\$
 3 = 5000万\$ - 1億\$

위의 表에서 1, 2, 3, 의 数字가 表示하는 金額의 上限線額을 各々基準하여 武器需給總額을 보면 美国이 7億5千万\$이고 蘇聯은 5億7千万\$이다. 그리고 中共은 5億\$로 計算된다. 그런데 50~60年間인 10年間을 한 時期로 보고 61~68年間인 8年間을 다른 한 時期로 区分하여 美国과 蘇聯이 各々 南北韓에 需給한 武器供与額을 앞의 表에 나타난 数字에서 檢算해보면 50~60年間の 美国의 对韓武器供給은 数字1, 2, 3의 頻度を 通算한 数字總和는 11이고, 蘇聯의 그것도 11이다. 그리고 61~68年の 경우도 같은 方式으로 따져본 数字의 頻度個數總和를보면 美国이 8이고 蘇聯도 8이라는 数字를 보여준다. 即 이것은 美蘇가 共히 对韓半島政策에 있어서의 軍事政策的 配慮는 韓半島問題가 美蘇雙方의 相互均衡을 破壞해서는 안된다는 点에 穩重하여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

(表 二)

1950 - 1960		1961 - 1968	
美 国	基準數 頻 度	基準數 頻 度	
	1 = 4	1 = 6	
	2 = 5	2 = 2	
	3 = 2	3 = 0	
	計 11	計 8	
蘇 聯	1 = 6	1 = 6	
	2 = 4	2 = 1	
	3 = 1	3 = 1	
	計 11	計 8	

기도 하다. 이 事實은 특히 对南北韓 武器需給 機品種에 있어서도 그 重点裝備의 需給比가 大同小異한데서 두드러짐을 엿볼 수 있다. 다음 表(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蘇는 共히 需給裝備의 第一順位를 戰斗航空機類에 두고 있으며 (北韓은 全体裝備의 總79.4%이며 南韓은 66.6임) 다음은 탱크, 미사일順인데 北韓의 경우는 탱크가 全体裝備中 6.5%인데 比하여 南韓은 15.4%이고, 미사일의 경우 北韓은 全体裝備의 10%인데 比하여 南韓은 8.7%라는 數值를 보여주고 있다. 艦艇의 경우 戰斗艦에 關한 限 3.5%가 南北에 共通된다는 點도 注目을 끌게 된다. 어떻든

(表 三)

TABLE 15.4 南北韓：品目別 主要武器需給表

US, 100万\$, 1968 年經常價格

	1950- -54	1955 -59	1960 -64	1965 -69	Total 1950 -69	Per cent of total
North Korea(北韓)						
Aircraft						
전 투 기	246	200	11	53	510	77.5
수 송 기	2		6		8	1.2
훈련·연락기		1			1	0.2
헬리콥터	1			2	3	0.5
Ships						
전 투 함		6	1	16	23	3.5
기 타		2	2		4	0.6
탱 크	18	15	10	1	43	6.5
미 사 일				66	66	10.0
Total	267	224	29	138	658	100.0
South Korea (南韓)						
Aircraft						
전 투 기	32	116	15	105	267	63.3
수 송 기	6				6	1.3
훈련·연락기		2	2		4	1.0
헬리콥터		4			4	1.0
Ships						
전 투 함	10	2	2	1	15	3.5
기 타	2	16	7		24	5.8
탱 크	33	12	17	3	65	15.4
미 사 일		1	2	35	37	8.7
Total	83	151	44	143	422	100.0

SOURCE: 上掲 SIPRI, 第3 世界斗의 武器交易, (上掲),
P.409, Table 15.4 에서

이것만으로 서도 美蘇의 對韓半島武器需給政策 即 軍事政策은 相互
均衡原則에 立脚한 시-소게임을 벌여 왔음을 一目으로 짐작케
한다.

그런데 위의 武器數들은 其實 美蘇의 水準에서 보면 一種의 戰
術武器인데 比하여 南北韓의 立場에서 보면 가장 緊要한 戰略武器
로서 機能, 役割한다는 點을 看過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적어
도 武器體系에서 看取할 수 있는 南北韓의 「戰術概念」은 美蘇의
對韓半島政策上的 「戰術的」次元에서 決定돼 왔다는 事實과 推移傾
向을 非常한 關心으로 注目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美蘇의
對韓半島政策上的 「戰術的 考慮」는 그 技術적 고려가 바로 美蘇의
世界戰略目標, 達成을 爲한 全般的 戰略政策展開過程에서 派生되는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은 結論的으로 基本的으로 現狀維持
이다. 그러면서도 南北韓을 두고 볼때, 美國은 政治, 經濟, 軍事
및 外交的으로 大韓民國을 支持応援하는 것이 一貫된 政策이며 對
韓半島政策의 核心이다. 이와같은 一貫된 大韓民國支持政策은 勿論
韓半島의 安定을 圖謀하려는 基本戰略展開이며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一次的으로 韓半島의 對決的 緊張狀態를 緩和하는 일에 골몰
해 왔다. 南北이 다시 激烈한 紛爭이나 軍事的 衝突事態로 發展
하게 되면, 이와같은 事態로 말미암아 美國의 對中共, 對蘇政策變更
를 強要 當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如何한 형태던지

紛爭의 再發을 極力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韓이 武器, 裝備, 兵力面에서 可能的
限 均衡을 이루어야 하고 韓半島에서는 可及的이면 小規模의 軍事
力이 存置, 維持되어야 하며 그러므로써 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策
을 具現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半島에서 南北韓
의 體制共存을 꾀하는 한편, 韓半島의 安全保障은 極東平和의 核心
이므로 韓半島問題 處理를 爲해 蘇聯이나 中共 및 日本과 더불어
韓半島에서의 政治의 共存을 公式化 乃至는 制度化할 수 있도록 南
北韓의 共同努力을 促求하고 있는 것이다.

2.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소련이 그 世界戰略目標達成을 爲한 最高支柱로 삼고 있는 것은 우선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들 수 있다. 이것을 基礎으로 한 소련의 最大世界政策綱領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世界社會主義革命을 完遂하는 일인 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美國과 相應되는 超強大國으로서의 소련의 位置를 保全하며 強化育成하는 데 두고 있다. 한편 이 궁극적 목적을 다하기 위한 現實適應의 最小政策綱領으로서 평화공존, 현상유지, 長期的 軍事安定 및 強大國間의 世界政策, 戰略目標과 共通된다. 基本的으로는 美國과의 互惠의 權益保全 (Parallelism of interest) 과 互惠의 「平等한 安保概念」 (equal security) 을 導入해서 對美協調 경쟁, 공존路線을 내세우고 있다. (參照- Adelphi Papas N = 65, N=66, N=91-92: European Security and the Soviet Problem, Report of a Study Group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Conflict London, 1971, eop P.1-6: Russia's Global Policy)

요컨대 소련의 위와같은 對世界戰略, 外交目標의 基本路線 속에 소련의 對韓半島政策이 묻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련의 對韓半島政策 卽 좀더 具體的으로는 對北韓政策도 美國의 對韓政策과 마찬가지로 汎世界的 地域對象問題와 直結되어 있고, 따라서 소련의 對韓政策이라 해도 그것은 소련의 對世界政策, 戰略展開의 一環으로 存在함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위와같은 소련의 對世界戰略外交의 基本目標을 勘案하면서 소련의 對韓半島基本政策을 具體的으로 要領하면 다음과 같이 集約表記 할 수 있다.

極東政治에 있어서 韓半島問題는 「戰后處理問題」의 一環일뿐 아니라 東北亞細亞平和保障의 關鍵인 同時에, 出發부터 美蘇가 直接介入된 地域이었고 따라서 美蘇共同의 國際責任地域中의 큰 比重을 占해 왔다는 事實은 앞에서 잠간言及해 두었다. 그런만큼 美國이나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특히 政治的, 軍事的 側面에서 볼때 美蘇 雙方을 爲한 「均衡」政策을 配慮해온 代表地域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소련의 對韓政策傾向이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이 傾向은 상당기간 동안 堅持될 것이 展望된다.

그리하여 蘇聯의 對韓政策基本은 특히 美國의 對韓政策을 決定的으로 不利하게 하는 정책적 자극을 피하려는 點이 特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反對로 美國의 對北韓政策이 決定的으로 소련에게 不利하게끔 政策展開하는 일을 企圖, 自勵하는 일과 共通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소련은 韓圍이나 北韓이 美蘇間의 均衡을 깨트리는 狀態로 擴大될지도 모를 一連의 「現狀打破的」인 政策路線을 取하는 것을 결코 願하지 않는 立場이다. 따라서 北韓은 中蘇紛爭關係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存在이고 보면 万若에 北韓이 取하는 政策

態度에 있어서 지나치게 中共偏의일 경우에는 소련은 北韓에 대하여 軍事戰略的, 外交的 制約을 加增할 수 있는 公算이 언제나 큰 것이며, 특히 經濟的, 軍事的으로 北韓에게 統制를 加할 수 있는 与件이 中共보다는 소련에게 有利한 편이라고 看做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의 對韓半政策이 언제까지나 固着돼 있는 것은 아니다. 多分히 流動的일 수 있는 潛在要因도 勿論 있는 것이다. 바로 소련이 「아시아集團安保體制」의 創設構想을 提唱하면서 韓半島問題를 포함한 아시아문제 全般에 걸친 平和的 解決方法 모색을 強調하면서도, 소련은 如前히 政治, 經濟, 軍事, 外交的으로 北韓을 적절히 檢제조치를 取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그 대신 美國도 그 對韓政策 實施過程에 있어서 美蘇의 互惠的 共同利益에 위배되지 않는 線에서 적절히 自体調整해 줄 것을 바라는 立場이다. 따라서 蘇聯의 對韓政策基本은 美蘇協力關係 增進이라는 큰 테두리 속의 對美政策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投映된다고 結論할 수 있다.

가령 蘇聯이 取해온 對北韓政策態度變化의 最近動向을 간추려 보면 매우 示唆的인 點을 發見할 수 있다. (參照- 北朝鮮의 統一政策と ソ連의 反應, 原子林二郎, コリア洋論, 73年3月号, P. 2~P. 11). 即 蘇聯은 金日成政權이 지나치게 과격한 外交政策路線을 편다든가 或은 武力至上主義 또는 軍事政策實施로 韓半島內의 軍事安定을 깨지게 한다든가 中共에 偏重密着하는 일은

絶對로 바라지 않는다는 點이다. 이 때문에 確實히 中蘇는 北韓이 自己네들 편에 보다 가깝게 서줄 것을 尊重하는 立場에서 때로는 中蘇間의 신경질적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그런데 1972年4月, 中蘇는 共히 金日成의 60回 生日에 즈음하여 祝電을 보냈는데 소련은 브레즈네프, 코시긴, 포드고르니連名의 祝電및 電지에서 北韓의 「平和統一」努力을 2번이나 支持強調했고 中共의 電지 內容에서는 (毛沢東-周恩來連名) 平和統一努力을 가법게 言及했다. 또 소련은 所謂 美帝, 日本軍國主義 및 韓國問題에는 言及이 없는데 比하여 中共것에서는 反美帝, 日本軍國主義 및 韓國에 對한 「斗争」을 激勵하는 대목이 눈에 띄게 強調됐다. 또 72年4月24日의 北韓 人民軍創設40周年記念日에 소련은 현재 아무런 實權도 없는 高尙의 모스카렌코元帥를 平壤에 派遣한데 比하여 中共은 陳錫聯등 高位級 實力 있는 軍事使節團을 보낸 것을 보아도 소련이 北韓에 對하여 取하는 政策態度의 一端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특히 소련은 72年の 7.四南北共同聲明에 對한 反應에 있어서도 前例없이 이를 早期報道하는 同時에 (푸라브다, 7月5日字로), 北韓의 朴成哲의 七.四共同聲明에 對한 記者會見內容도 상세히 論評 報道해 주므로써 北韓의 一硬化一辺到의 外交政策이 多少나마라도 누 구러지는 傾向徵兆를 激勵해주는 態度를 取한 點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67~69年間 現在만 보드라도 소련의 對北韓經濟協力交涉의 主動人物은 軍事工業担当副首相인 블라디미르, 노비코프였는데 最

近에는 發電所建設等技術者인 이그나티프, 노비코프副首相이 對北韓 經濟協交渉担当 主役으로登場한 事實이라든가, 또 72年 以後로는 소련 共産黨과 北韓勞動黨關係協力調整을 爲해 브레즈네프의 心腹이요 對北韓共産黨關係員인 카트세프가 平壤을 訪問하는등, 말하자면 소련의 對北韓關係에 있어서는 軍事重點인 面보다 차라리 經濟技術的인 分野에서 보다 새로운 紐帶強化를 指向하는 政策態度를 如實히 보여 주고 있다는 點을 注意해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要컨대 經濟援助, 軍事援助라는 決定的 힘줄을 操作하여 소련은 北韓政權에게 事實上的 內政干涉面에 있어 中共보다 우세한 特權을 留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現代의 軍事裝備, 武器의 新種需給, 部分品補給, 高性能燃料補給面에서는 中共보다 소련이 월등한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結論한다면 蘇聯은 韓半島에서의 美蘇의 均衡, 北韓의 現狀打破路線 牽制 그리고 南北韓間의 軍事安定과 體制共存策을 圖謀하는데 있으며, 이런 것들이 美國, 蘇聯이 取하는 對韓半島 政策上的 一致點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中共의 對外政策基本目標과 對韓半島政策 - 출기차게 소련과 理念紛爭을 벌여온 中共이지만 그 對外政策 基本路線은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卽 부르레타리아트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하여 社會主義 諸國과의 友好協力關係를 加一層 發展增大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毛沢東의 世界社會主義 革命路線을 貫徹하기 爲하여 世界의 被壓迫人民들로 하여금 民族解放斗争을 展開하는데 積極 支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같은 對極的 目標을 達成하기 爲해 내세우는 最大政策綱領原則으로서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나라라도 關係改善을 促進하는 平和共存 原則이다. 領土의 保全과 主權의 相互尊重과 相互不可侵, 그리고 相互內政不干涉, 互惠平等 및 平和共存 등으로 契約되는 平和五原則이 中共의 對外政策 基本路線의 支柱이다. 때문에 帝國主義政策과 侵略政策 및 軍國主義를 絶對히 反對하는 立場인 것이다.

위와같은 基本路線이 實踐可能할 수 있는 現實的 方法으로서 특히 平和共存政策을 國際政治에서 幅넓게 適用하고 있다. 그것은 具體적으로 UN에의 復歸를 爲始하여 對美關係·對日關係의 關係正當化의 基礎를 다지는 作業으로 證明됐다. 美國이나 日本과 같이 기왕의 敵對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敵對性を 止揚, 解消하고 協力の 場을 構築하면서 紛爭解決을 爲하여는 武力不行便原則과 平和五原則에 立脚하여 解決하고 平和共存해야 한다는데 重點두고 있다.

특히 中共立場에서 볼 때 美國과의 共存·協力關係를 樹立하여 갈 運當해 나간다는 것은 美國으로 부터의 經濟通商·貿易上의 協力の 길을 여는 일일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世界政治舞臺에서

의 中共의 政治的 發言權을 応援받을 수 있고 保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蘇聯으로부터의 政治·經濟·軍事의 壓力과 威脅을 封鎖 乃至는 防止해 낼 수 있는 効果的인 對應策이 되는 것이다. 이 길이 中共의 實質的인 國家利益을 保障받는 方便이라고 看做한다면 中共이 對日關係 正常化를 本軌道에 올려놓은 것도 中共이 對美政策을 取하는 背景說明과 똑같은 論理가 適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美國은 安保體制에 依해서 굳게 結束돼 있기 때문에 美國關係만을 敵對性解消와 關係正常化를 期하고 日本에 對해서는 如前한 敵對關係를 持續한다는 것은 中共의 世界外交政策實施에 있어서나 對蘇政策面에서 有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現在의 狀況으로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의 政治問題 處理에 있어서 美國·中共·日本은 互惠原則상의 相互權益이 保障될 수 있는 경우에는 3大國間의 同調協力은 比較的 無難할 수 있는 形便에 놓여 있다고 볼만 하다. 다만 中共立場에서만 보면 美일이 中共만을 爲해 結束支援해 준다면 中共의 對蘇政策 高姿勢를 取할 수 있을 터이지만 美蘇協力關係나 蘇·日接近關係는 中共만의 政治目的을 充足시켜줄 수 있을만큼 간단한 問題는 아니다. 또 蘇聯의 立場에서 보아도 美·日·中 3大國이 中心이 되어서 적어도 아시아 政治問題에 關한것만이라 하더라도 蘇聯의 權益保障을 排除하는 方向으로 共同反蘇戰線을 扯나간다면 소련으로서는 重大한 死活問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韓半島問題와 같이 美·蘇·中·日의 깊은 利害關係

가 얽혀있는 根本政治問題에 있어서도 美日・美中・中日間 頂上會談 共同聲明에서 共히 強調되고 있는 바와같이 어느 特定國家의 이 地域에 있어서의 霸權秩序만 許容되지않는다면 美蘇中日등 四大強國間의 이 地域의 諸般현안문제해결을 爲한 「共同保障措置」는 比較的 容易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가령 韓半島問題를 놓고 볼때 這間에 美中・中日・美日등 頂上會談을 통해 共同聲明內容에 反映된 傾向의 共通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겠다. 卽 韓半島問題解決을 爲해서도 어찌까지나 非軍事的 方法의 尊重・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均衡 및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의 一強大國의 霸權(헤게모니) 排除를 통한 美蘇中日間의 勢力均衡이 圖謀될 것을 重要視하며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雙方의 政權에게도 韓半島問題 해결을 爲해 平和的 方法에 依한 自主的 共同努力이 傾注돼 줄것을 列強은 要請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結論한다면 1971年 8月, 周恩來가 美國의 NYT 副社長 제임스·레스톤과의 會見內容을 引據論証할 수 밖에 없다. 그 大綱을 要領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卽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方案을 示駁하는 가운데 「南北韓 兩者委員會」같은 것을 設想하는 問題를 提起하므로써 南北韓間의 和解에 言及했으며 中共은 基本的으로 美國이 南韓을 積極 支持하는 限에 있어서는 結局 韓半島事態의 「現狀維持」가 不可避한 現實問題로 狀況判斷하는 것이다. 그리고 屬는 日本의 軍國主義 復活을 심각하게 경고 했으며 이어서 韓半島事態가 惡化(韓半島에서의 紛爭再發을 意味)될 경우에는 日本의 韓國에 對한 軍事的 介入可能性(美

軍撤収后의 日本의 美國代役을 主張했다. 이는 禹若에 韓半島에 紛爭이 再發할 경우 美日의 軍事介入을 充分히 想定하고 말한 것으로 看做될 뿐만 아니라 北韓의 對蘇依存度가 不可避해질 것도 念頭한 發言이라고 看取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韓半島에서의 戰爭 狀態가 未終結임을 想起시키고 「平和條約」의 締結이 必要하다는 點을 暗示하는 한편 南北韓間의 體制共存을 통해 「韓國의 平和의 統一을 向해나갈 方法가 摸索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中共이 推進해온 이른바 平和共存 5原則을 토대로 日本·中共·美國·蘇聯間의 相互 「不可侵條約」締結可能性을 示唆한 點도 上記 4大強國이 韓半島問題 處理를 爲해 取하는 政策態度方向을 把握하는데 重要한 參考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中共의 對北韓政策路線의 基本性格은 어떤 경우라도 金日成政權이 對蘇依存度を 深化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그렇다고 北韓이 對中共接近強化策을 必死的으로 圖謀해 온다 알지라도 金日成의 武力統一政策方案을 根本的으로는 顧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金日成을 軍事援助面에서 積極 支援해줄 경우에는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基本方向과 어긋나는 處事일뿐 아니라 그와같은 對北韓政策을 實施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南北韓間의 새로운 軍事的 競爭關係를 助長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韓半島事態의 惡化는 結局 中共의 實利를 阻害하고 4大強國間의 勢力均衡이 깨지는 동시에 韓半島에서의 列強의 勢力共存마저도 破壞하는 事態發展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形態로든지 韓半島의 安定 및 平和保障이

이루어져야만 아시아의 平和·中共의 實利가 保全된다고 보는 것이 中共立場이라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中共이 韓半島安定 및 平和保障의 安全辨일 수 있는 駐韓美軍의 早期撤收를 強硬하게 고집하지 않는 理論的 根拠를 찾아 볼 수 있는 點이겠다.

이와같은 世界戰略目標와 對韓半島政策의 現實的 手段 卽 政治的目的을 効果적으로 達成하기 爲한 中共의 軍事實力 基礎은 卓越強大國의 面貌를 充分히 갖추고 있다는 事實도 看過해서는 아니 된다.

지금 中共의 戰略核武器 軍備水準은 비록 美蘇를 正面에서 相對할 만큼의 攻防武器體系를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成長發展進展表는 날로 上昇記錄을 마크하고 있는 중이다.

中共이 這間에 一貫해서 取해온 그 核開發問題의 基本姿勢는 「超大國의 核独占反對」, 「中國의 核兵器開發은 防衛的이며 超大國의 核独占을 打破」하기 爲한 手段으로, 그리고 「核武器의 全面禁止와 廢棄를 위한 世界首腦會議開催」, 「中國은 如何한 狀況에서도 先制核不使用」이라는 네가지 點에 集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中共은 最近 대가분絨의 核実験(73年 6月)을 實施한 바 있다.

이것으로서 中共은 核時代에 相応한 「國防力」이 增大되고 있음은 불임없는 事實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函都市를 射程範圍에 카바할 수 있는 射程距離 2천 4백㎞ 乃至 4천 8백㎞의 準中距離 彈導미사일(MRBM) 50基를 이미 對蘇戰略配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人工衛星은 이미 發射成功한바 있으며 其他 中距離彈導彈(IRBM) 및 大陸間彈導彈(ICBM)도 開發保有配置段階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형편이다.

이와같이 現代 世界軍事戰略上的 중대한 核미사일武器의 世界第3位가는 戰略戰力能力을 背景삼아 그 海軍力도 潛水艦과 小型驅逐戰艦을 主軸으로한 數量面에서의 世界第3位를 占하고 있다. 또 近海戰鬪用的 小型戰艦艇을 數百隻이나 保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미사일發射用 小型快速戰艦艇도 가지고 있다. 특히 40隻 以上이 되는 中共의 潛水艦 戰力은 黃海 - 東支那海 - 南支那海 - 韓國海峽 - 牙海 등의 넓은 海域을 作戰圈行動半徑으로 덮고 있어서 通常海軍戰鬪能力으로서는 蘇聯의 極東艦隊에 다음가는 存在인 同時에 美國의 第7艦隊나 日本의 海上自衛隊에게는 重大한 威脅의 存在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든 中共의 核戰略이나 在來通常戰略이 모두 「防衛的」인 것은 中共이 애써서 標榜하는 名分이지만 核戰略能力保有의 反對給付로서 世界政治上的 發言權 增大와 特別 아시아·極東政治에 있어서의 影響力 行使를 爲한 實力的 與伴을 廣範圍하게 深化했고 構築해 놓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中共도 今世紀의 世界政治情勢 變動의 全般的 推勢라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의 鈍化現象과 世界政治秩序의 多極化體制를 正직하고 現實的으로 받아 들이면서 對美·對日關係 改善 및 正常化過程의 振幅을 넓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中共의 世界戰略概念도 美蘇 등 強大國群의 戰略概念과 大同小異한 方向定立을 하고 있는 것이다. 勢力均衡 등등이다. 中共의 이와같은 戰略概念은 具體的으로 70年代의 韓半島 安全保障問題에도 至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注意하지 않을 수 없다.

4. 日本의 軍備政策과 對韓半島政策 - 日本은 아직 世界戰略的 環境條件으로는, 美日安保體制속에 묶여 있다. 때문에 日本의 軍備政策 推移나 戰略目標가 당장은 美國·中共등과 같이 「世界戰略的 意味」를 決定해 주는 水準의 存在는 아니다. 그러나 美國의 核雨傘下에 적어도 通常戰力 補充을 爲한 無理가 없는 自体安保·防衛體制를 지탱해 가는 經濟大國으로서의 諸般底力이 確保되 있기 때문에 現在의 戰力增強·軍備政策方向은 앞으로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政治大國이 될 土臺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셈이다.

먼저 日本의 独自の 戰略概念定立을 補完해 주는 方向指針으로서 外交政策路線을 檢證해 본다. 日本外交政策路線의 基調를 綜合的으로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다.

(1) 世界政治의 多極化現象속에서 平和共存과 緊張緩和라는 一般的 趨勢를 利用하여 보다 經濟實利인 諸國과의 關係改善·外交活動을 積極化하고

(2) 美日安保體制的 繼續유지와 아시아防衛를 爲한 應分の 責任分担을 前提로 점차적인 軍備增強策을 펴하여

(3) 아시아의 安定과 緊張緩和를 爲해 寄與하는 一環으로서 中共과의 國交回復·關係正常化를 成就增進하여

(4) 對蘇友好協力關係 增進을 爲하여도 積極的 交渉을 推進하는 한편

(5) 對韓友好協力關係 發展增進을 根幹으로한 對北韓關係도 均

衡있는 再調整을 標榜하고 있어 이른바 對南北韓等 距離期間을
내 걸고 있다. 이와같은 現田中政權의 外交政策基本方向은 最近
年間の 日本의 「外交青書」와 這間的 美日 中日頂上會談의 共同聲明
등을 통해 如實히 確認해 준비 있다. 이러한 外交政策 基調를
勘案하면서 現在 日本의 戰略概念과 軍備政策方向을 把握하면 70
年代의 아시아의 戰略環境에서 日本이 役割하게 될 位置가 무엇인
가를 명백하게 浮刻시킬 수 있다.

지금 日本은 1976년에 끝날 第四次5個年防衛力整備計劃 期間에
있다. 이 計劃에 投入될 確定予算規模만 하드라도 4兆6千3百億
圓의 資金을 使用하게 되었다. 戰略概念으로서는 「專守防衛」라는
이름의 守勢戰略概念을 標榜하고 있지만 實際에 있어서는 「積極의
前進防禦戰略概念」을 重點의으로 強調하는 戰略態勢整備政策을 取하
고 있다. 「局地制限戰爭」에 相應할 수 있는 建軍政策을 實施한
다는 것이다. 그리고 「防衛構想」의 基底로서 「美國과의 安保體
制를 堅持하며……核의 威協에 대하여는 美國의 核抑止力에 依存한
다」는 點을 明示하고 있다. 또 第4次防은 계속사업으로서의
「第5次防衛力整備計劃」으로 延長될 것이라는 政策腹案이 政策當路
者에 依해 公言해 논바 있다.

第4次防年間을 통한 軍備政策의 重點的 方向은 陸戰裝備에 있어
서는 戰車等 機動力·火力增強向上에 主眼點을 두고 있으며, 空軍裝
備는 防空力強化를 爲해 最新銳戰 (FAEJ)의 國產化와 地對空誘導
彈部隊의 增編強化를 꾀하는 同時에, 海上自衛隊는 周辺海域防衛能力
強化를 爲해 最大의 整備目標을 두고 있다. 특히 最近에는 海域

防衛 및 海上交通安全保障을 爲한 戰力擴大布石으로서 「1천km 海域 防衛論」까지 抬頭하고 있는 實情이다.

비록 「非核3原則」에 묶이어 現在까지는 核開發保有政策은 상당한 制約을 받은 것이 事實이지만 現在의 經濟国力을 背景으로 하고 美國 및 其他 西方勢力國家들과의 核開發技術協力面을 勘案한다면 日本이 必要하다고 政策判斷 했을 경우 日本은 一時에 核保有國으로 登場할 公算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든 第4次防 終結年間이 되면 日本은 名實 共히 非核國家이면서도 核國家潛在能力을 充分히 갖춘 軍事大國의 面貌를 一新하게 될 것이다. 經濟大國의 튼튼한 基盤위에 構築된 軍事大國은 必然의 으로 「政治大國」의 役割이 賦與되는 것이다. 政治大國의 政治的 役割은 그 周邇國際政治秩序의 政治的·經濟的·軍事의·外交的 環境與件까지도 條件賦與하는 것인데, 日本이 7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 아시아의 勢力版圖再編成過程에 있어서 取하게될 政治的 比重은 至大해 질 것이다.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保障과 安全保障問題에도 直接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戰略的 環境이 造成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72年8月の 美日頂上會談을 通해 나온 共同聲明은 「韓半島의 南北對話를 환영」했으며 「아시아에서의 緊張緩和 傾向을 더욱 助長하게 될 것을 希望한다」고 表現한 것을 注目해야 한다. 또 頂上會談 共同聲明에서도, (72年9月) 특히 「紛爭의 武力的 解決을 止場」한 다는 點과 「平和5原則에 立脚한 해결」을 強調하였다.

要件에 日本의 對韓半島政策도 基本的으로는 美国, 蘇聯, 中共의 그것과 大同小異한 것으로서,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追求, 現狀維持 및 戰爭再發의 防止와 長期的 軍事安定策을 圖謀하는데 重点두는 傾向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될 問題가 있다. 그것은 這間의 日本의 第4次防最終 確定段階에 이틀째까지 日本의 軍備政策方向에 對하여 벌여온 公論是非의 焦點이다. 가령 核武裝을 포함한 軍備의 上限線明示가 不分明하다는 點과, 軍國主義復活問題, 그리고 文樞優位原則의 保障問題가 浮려져가고 있다는 點에 批判의 화살이 集中된바 있음을 想起해야 겠다. 現在의 推勢로 보면 日本의 無限定한 軍備增強傾向을 潛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인데, 이 性向을 더욱 助長시켜 줄 수도 있고 또 日本自體의 防衛만을 爲한 軍備適正線에서 自制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와 韓半島의 全體的 狀況이 事實上「安定」되느냐 안되는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다. 卽 萬若에 日本 自身이 아시아의 全般的 「情勢判斷」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의 4次防 最終確定에 즈음하여 參考事項으로 情勢判斷한것 처럼 「……그러나 아시아地域에 있어서는 美蘇中3大國의 利害가 如前히 복잡하게 얽혀서 全體的으로는 安定된 긴장완화상태에 到達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他諸國間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緊張要因이 存在하고 있다. ……地域의 으로 或은 期間의으로 限定된 武力紛爭이 發生할 可能性을 不定할 수 없다」는 式의 狀況判斷을 取하게 된다면 日本으로서 「無限大」한 軍備增強策을 밀고 나갈 수 있는 自己正當化의 口實이 될 것

이고, 정말로 아시아全域 및 韓半島問題만이라도 北韓의 武力統一
政策이 根本적으로 變質하는, 同時에 韓半島 平和의 列強에 依한
國際共同保障措置가 取해진다면 日本으로서 끝까지 軍国主義 復活
方向의 建軍政策을 強行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韓
半島에서의 戰爭再發의 根本的 危險要素가 除去되지 않는다면 日
本の 軍備增強性向을 더욱 高潮시켜 주는 結果를 남겨 할 것이
며, 마지막으로 한가지 棼으로 되는 點이 있다면 그것은 現在의
日本の 軍備政策 推勢로보면 비록 아시아와 韓半島에서의 完全한
緊張緩和과 平和保全策이 마련된다 할지라도, 第4次防計劃이 完結
된 다음에는 日本으로서 軍備剩餘策의 處理를 爲해 심각한 試鍊이
抬頭될 것이 予想되는 일이다 이 경우 日本이 여러가지 形態
의 武器輸出市場確保政策을 避하게 될 때 派生되는 國際政治上의
環境操作問題에도 非常한 關心을 쏟지 않을 수 없는 問題라 하
겠다. (參照 - Japanese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by
Kunio Muraoka, Adelphi Papers, N. 95, London 119, Feb-
1973)

四、韓半島軍事安定化方案의 前提條件



四. 韓半島軍事安定化方案의 前提條件들

1. 南北對話의 基本性格把握問題 아시아는 世界政治의 물결속에 있으며, 韓半島는 아시아의 政治·外交·安保秩序안에 存立하는 地理的 不變數의 存在이다. 南北韓은 바로 이 韓半島안에서 彼此의 統一方案과 統一戰略이 서로 엇갈린 가운데 對決의 戰後史를 體驗해 왔다.

그런데 앞에서 言及된 諸章에서 世界政治 運營의 主役活動을 하는 나라들의 世界戰略目標과 對韓半島政策의 基本方向을 点檢한바 있거니와, 그것들의 全般的인 共通分母를 檢出해 볼 때

- (1) 現狀維持 (Status quo post bellum)
- (2) 緊張緩和, 戰爭防止, 南北對話 및 體制共存歡迎.
- (3) 長期的 軍事安定, 南北均衡策 圖謀의 要請과 尊重
- (4) 強大國間 勢力均衡을 爲한 互惠的 協力體制構策 및 互惠的 安保概念과 權益均配保全策등을 重要視하는 政策態度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南北韓이 共히 這間의 「對話없는 對決」로 一貫래은 政治的, 軍事的 競爭秩序를 清算하고 「對話있는 共存的 和解」秩序를 構築해 가므로써 祖國統一課業遂行의 定礎作業을 다할 수 있다는 巨視的 目標을 내 걸고 南北對話의 序章을 啓는 共同努力이 일단은 結果를 보게 된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上記한 바 있드시 「國際政治的 環境變化」의 副産物이라는 事實들을 認識하게 됐다. 그러니까 問題는 앞으로 南北韓의

共同努力方向이 「國際政治의 變遷變化」를 어떻게 現實的으로 잘 吸收消化하느냐의 與否가 곧 韓半島 運命決定의 一次인 關鍵이라 말 할 수 있겠다. 結局 南北韓의 獨自의 共同努力은 두말 할 것도 없이 美蘇등 강대국의 韓半島問題 處理를 爲한 大局의 政策成立과 그 實現이 뒤따라야만 南北韓關係의 平和的 解決이 保證된다는 事實과 直結되는 問題이다.

戰後의 韓半島問題는 다 아는 바와 같이 「戰後處理問題」의 一環으로 出發했다. 특히 「분단 국가문제」라는 側面에서 南北韓關係 設定은 特徵的이었다. 戰後處理問題라 함은 強大國政治의 關係物인 同時에 「戰後」에는 解決을 보아야 한다는 前提下에 「未決問題」로 둘러버린 世界問題라는 뜻이다. 韓半島問題는 그 典型的인 戰後未處理問題의 한 標本이다. 韓半島는 美蘇가 分割占領 政治地域化 했고 따라서 그들의 國際責任地域으로 出發한 것이 韓半島의 戰後的 運命決定이다. 때문에 自動的으로 韓半島는 他律的 條件賦與에 依拠하여 北韓地域에는 蘇聯을 背景勢力으로한 政治體制·共產政權秩序가 確立되고 南韓地域에는 美國이 保障하는 自由民主主義 政治體制와 政權史가 定着하게 됐다. 그리하여 「敵對概念」을 두드러지게 하는 政治이데올로기의인 치열한 南北對決과 軍事的 競争과 그리고 戰爭의 體驗을 通해 緊張狀態의 不斷한 高潮現象등을 夾르 韓半島의 悲劇的 運命을 播種해 왔을뿐 問題의 根本的 解決은 束手無策이 었든 것이 美蘇의 對韓半島政策의 責任이고 失策이기도 하다. 그러한 동안에도 南北韓에는 서로 異質的인 敵對的 體制發展을 劃策, 強化하는 일로 四半世紀를 지내는 셈이다. 야같은

韓半島의 事態展開과 運命決定은 分明히 美蘇의 世界戰略 및 對韓半島政策의 方向의 反射作用에 의한 結果事項이었다. 그러나 冷戰時代에는 철저한 이데올로기 對決戰爭의 尖兵役割로서 南北關係는 性格지워졌고, 協力的 共存秩序 및 현상유지, 긴장완화가 支配的인 方向定立時代에는 이에 알맞게끔 南北韓 關係의 狀況設定이 他律的으로 條件賦與되가고 있음을 認識해야 할 問題이다.

南北赤十字會談이 進行되 왔고 72年의 七.四共同聲明으로 「南北對話」의 決定的 契機가 마련 됐거니와 이것도 事實을 따진다면 國際的 環境變化의 反射作用이 韓半島에 단적으로 投映된 結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同時에 南北韓은 共히 世界戰略의 意味의 國際政治 環境變化에 外面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積極的으로 現實適応하려는 位置意識의 發露로서 南北對話 具現의 決斷을 낸 所産이라는 點도 自負해야 할 點이겠다.

南北對話의 具現過程이 國際政治的 環境變化의 副產物이라면, 韓半島 周辺強大國의 對韓半島 政策態度의 基本方向 및 共通分母는 곧 南北韓 關係의 「환경 변화」에도 直接적으로 投映되는 問題이다. 따라서 「協力的 平和共存」의 推勢는 南北韓間의 異質的 體制間의 「協力과 共存」을 促求하는 意味인 것이며, 現狀維持策이 強調되는 것은 分斷韓國의 「現狀凍結」이며 同時에 「두개의 韓國」을 暫定的이나마 韓半島에 당분간 定着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世界戰略上的 必要와 理由때문에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要請하고 특히 南北韓 關係의 緊張緩和를 圖謀具現하기 爲하여는 그 동안 「兩極化對立現象」을 지속해온 軍事的 競争狀態를 止揚하고

南北對話의 發展의 持續이 不可避함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을 묶어서 表現한다면 南北韓間의 體制共存이 至極히 現實的이라는 側面에서 이를 歡迎하는 國際的 狀況設定이라고 看做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韓間의 長期的 軍事安定策이 實現될 것을 要請하고 있으며, 南北韓이 早速히 「互惠的」일 수 있는 安保概念 乃至는 戰略概念이 確立될 것을 列強은 중용하고 있다. 또 互惠協力的 基盤에 立脚한 南北韓 基本關係가 定立 되어야만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強大國間의 勢力均衡 即 強大國間의 「互惠的 權益保全」에 發展의 寄與를 갖어올 수 있는 것으로서 「南北對話」의 健全한 運用發展을 관형하는 것이 韓半島의 對內外的 戰略環境인 것이다.

2. 六·二三宣言과 南北韓關係

1973年6月23日 朴正熙大統領이 提唱한 6.23平和統一政策 宣言은 大韓民國政府가 그 統一政策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모든 容納的 國際環境 變化를 想定하여 現實接近的 方法으로 民族의 至上課業을 遂行해 나가겠다는 政策 姿勢를 明白히한 것이다. 即 同政策宣言은 韓半島問題의 國際政治的 性格을 剔抉하는 한편 南北韓의 自主·共同努力에 依한 平和統一을 이룩해야 한다는 點이 強調되었다. 또 南北韓 基本關係의 基礎定立을 위한 行動方針 闡明이라는 點에서도 6·23 宣言은 重要視되어야 한다.

同宣言을 總體的으로 分析·檢討한다면 다음 몇가지의 重點的 考慮를 배놓을 수 없을 것이다. 即

(1) 韓半島問題 解決의 現實接近의 方法이 賢明한 政策姿勢인
을 밝혔고,

(2) 南北對話의 계속적 努力을 통해 兩體制間의 異質性을 점진
적으로 융화 조절해 나간다는 基本立場이 闡明된 셈이며,

(3) 独自の 體制安定과 保全努力이 南北韓의 發展의 共存·安定
·均衡을 爲해 現實적이고 正當한 自己責任完遂라는 點을 國際社會
에 몇몇하게 闡明했고

(4) UN을 비롯한 國際社會機構등에서의 南北韓의 共存 協力態
勢 增進努力이 統一의 障礙要素를 能動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
는 빠른 길인 同時에

(5) 東西障營에의 門戶開放을 비롯하여 互惠原則을 尊重하는 基
盤에 立脚한 異質體制 國家와의 關係改善·擴大를 爲해 努力할 것
을 申明했으며

(6) 世界潮流인 平和共存原則에 順応하여 外交政策 基調로서 平
和善隣外交를 펴나갈 것을 다짐 했다.

그런데 특히 以上과 같은 巨視的 實踐構想과 統一政策 姿勢闡明
이 成功的으로 잘 結實할 수 있는 基本條件으로서 宣言第2項에
標榜된 內容은 注目할 가치를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即

(1) 南北韓間의 平和的 關係維持.

(2) 相互間의 內政不干涉.

(3) 武力不可侵무드가 造成되는것.

등이. 急先務임을 態度闡明한 點이다. 이와 같은 外交政策
態度표명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一國의 實踐的 意志具現을 反映해

높은 政策宣言이며 政策實施의 行動方針으로 提示된 것이기 때문에 國民과 世界列強, 國際社會는 大韓民國의 보다 積極的이고 現實接近의 유연한 姿勢를 「期待」하는 것이며 특히 外交政策 및 外交活動 展開面에서 「期待」에 副應해 줄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大韓民國 政府가 取하여야 할 對內外的 政策實施는 韓半島 周邊強大國들의 6.23宣言에 對한 好意的인 對韓政策 態度를 우리에게 有利하게 受容하여 이를 잘 活用하는데 힘써야 하며 韓國의 能動的 與件造成 努力에 列強들은 다음과 같은 期待感覺이 強烈하게 作用해울 것이다.

첫째, 宣言속에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強調한 만큼 進정으로 이를 實現段階에 옮겨 놓으려면 平和的 體制共存의 第一段階作業으로서 韓半島의 戰爭狀態를 終結시키는 制度化 措置와.

둘째,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다짐된 만큼 互惠平等原則에 立脚한 南北間 基本關係條約을 締結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셋째, 서로 「侵略을 하지 않기」를 위하여서는 南北韓間의 長期的 軍事安定策이 凶謀되야 할뿐만 아니라, 武力不使用 및 不可侵條約 締結등의 基本問題들을 해결해 나가기 爲한 南北韓의 政治的 共同努力이 投入되줄 것을 「期待」하게 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早晚間에 南北韓間의 軍備凍結策 乃至는 軍備減縮問題가 拳論되고 相互拘束의인 規制措置가 取해진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어떻든 6.23宣言은 적어도 外交的 환경변화에 隨하는 韓國의 能動的 姿勢定立의 決定的 轉換契機이고 出發點이라는 뜻에서 韓國 安保의 正軌道를 튼튼히 해주는 길잡이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6.23宣言은 곧 韓國의 立場의 戰略概念 確立方向을 提示해 놓은 것으로 일단은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南北韓關係 定立의 基本視角을 整頓해놓은 政策宣言이기 때문이다.

3. 韓國의 戰略概念 樹立方向——一般的으로 戰略概念은 設定된 國家政治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現實的 手段。方便으로 定義되고 理解하는 것이 普通이다. 이 경우 「國家政治目的」은。마치 國家 安全保障概念이 個別的인 性格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個性的이며 獨自인 것이다.

그런데 戰略의 類概念은 國家戰略과 軍事戰略으로 区分해서 把握하는 것이 常例이다. 또 國家政治目的이 「個性的」인 것이라면 國家戰略이나 軍事戰略이라는 것도 結局은 一國的·個性的인 것으로 歸依하게 되는 것이며 때문에 여기서는 「韓國」의 國家戰略과 軍事戰略이 問題되는 것이 겠다. 그렇다면 「韓國的」인 것은 과연 무엇이며 韓國의인 政治目的 그리고 韓國의인 國家戰略 軍事戰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明白하게 따져두어야 할 必要가 생긴다.

두말할 必要도 없이 韓國의 實踐政治目的은 무엇보다도 祖國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는 課業을 優先的으로 遂行하는데 있는 것이며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國民과 國家政府의 安全保障을 圖模하는 일인 것이며 外侵과 外部威脅으로부터 國家와 國民의 日常生活을 保護해야 하고 國民과 國家의 利益을 保全해야 하며,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國家의 政治的 獨立을 守護해야 할 義務와 責任을 다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結論할 수 있다. 이같은 使命意識이 結果된 政治目的을 實現할 수 있게끔 現實的으로 保障해주는 手段이 다름아닌 韓國의 立場에서 樹立實施되어야 할 國家戰略이며 軍事戰略인 것이다. 그렇게 볼때 비록 韓國의인 國家戰

略은 本便에 있어서 「個別的」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韓國은 「世界속의 韓國」인 때문에, 以上에서 言及된 바와같은 韓國의 國家戰略 및 軍事戰略을 樹立하여 實踐展開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韓國 및 韓半島를 둘러싼 對內戰略 情勢判斷이 곧 韓國的 戰略概念 定立을 爲한 基本的인 狀況判斷의 對象與件이라 할 수 있다. 이 일들은 앞에 記述한 諸章節에서 이미 論証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부연해들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國家戰略과 軍事戰略과의 相關關係 및 位置序階를 分간해서 理解해 두는 것이 韓國의 戰略概念을 完立하고 實施展開하는데 參考가 될 것이다.

國家戰略 (National, total, Grand Strategy) 은 國防政策 및 大局의인 建軍政策의 方向을 提示해 놓아야 하며 同時에 長期計劃이어야 함을 大前提로 한다. 그리고 平時와 戰時에 共히 適用되는 策略이며, 國家 基本政策目的의 具現을 補弼해 주는 方策이고 軍事戰略의 上位的 存在役割로서 機能하는 것이 特色이다.

한편 軍事戰略 (military strategy) 은 國家戰略의 基本方向에 沿해서 그 目標을 達成해 주는에 必要한 實踐手段 即 諸般 用兵術이다. 그러니까 軍事戰略은 한마디로 制約要素가 많은 것이 特徵이다. 對內的狀況, 對外的 狀況與件에 依해서 制約을 받으며, 國家戰略目標가 定하는 바에 따라서 軍事戰略으로서 取하게될 選擇의 手段에 있어서도 限定的 要素가 많이 介在한다는 뜻이다. 그 序階位置를 말한다면 國家至上 課題目標가 있고 그 다음 政治目的이 設定되며, 이의 實踐方略으로서 國家大戰略이 있으며 그 밑에

軍事戰略이라는 것이 位置하게 된다. 따라서 軍事戰略을 樹立·
 實施。運用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언제나 政治目的 達成優先이라는
 政策考慮가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이다. 万若에 軍事戰略
 優先 即 軍事目的優先을 爲해 政治目的이 副次的 作用을 한다면
 一國의 國策方向은 自動的으로 軍事重點主觀의 戰時政策을 取하지
 않을 수 없는 危險을 自招하게 되는 것이다. 勿論 軍事戰略의
 實施는 언제나 相對的이기 때문에 「敵國」의 存在가 明白하고 그
 敵의 我方에 對한 威脅度가 強烈하게 作用할 경우에는 이에 對
 應하는 現實的 手段으로서 我方도 不得不 重點對策을 講構하는
 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그러나 世界戰略의 支配의 潮流가 非軍事
 的 方法(手段)을 尊重할때, 그리고 어떤 土着現實의 對內·外的
 狀況과 構造變化로 因한 自律的·他律的 現實要請으로서 政治的·
 經濟的·外交的方法(手段)이 軍事手段보다 重要視되는 狀況에 있
 어서는 軍事戰略은 어디까지나 政治·外交問題의 補完 手段이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現代軍事戰略의 한 定型化試圖를 이끌어 보므로써 韓國
 的 意味의 軍事戰概念 定立에 參考로 資코자 하는 바이다. 푸
 랑스의 現代戰略理論家의 한사람인 A. 보프르는 그의 「戰略論入
 門」(Introduction a la Strategie)에서 現代軍事戰略의 定石
 을 다음 等式으로 表現한바 있다. 即 $S = K F \phi T$ 라는 表記이다.
 K는 常數를 意味하며, F는 物量力을, ϕ 는 道德律-多分히 이것
 은 精神戰力要素로 解釋할 수 있다-, T는 時間的 要素임을 明
 記한다. 여기서 「常數」의 要素로 表記된 K는 多角的으로 檢証

해볼 필요가 있다. 卽 國力の 物質的·計量的 基盤은 大小強弱國의 差地에 따라서 相對値는 比較可能한 것이지만 個別國力の 絶對値는 比較的 常數要因으로 看做할 수 있는 때문이다. 가령 國土·人口構造·自然資源·地理的 條件等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F의 경우 物量力 그 自体만 보더라도 그것은 物的·資源的技術的 및 科學能力에 있어서 強弱國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其他 道德的·精神的 要素만은 全然 結果하게 되면 群小國의 경우라 할 지라도 自我個性을 充分히 잘 살려나갈 수 있는 強力한 武器라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時間要素로서의 T는 時宜·機會·運命等을 考慮해야 하는 것으로 看取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特定時代의 (時代感覺과 時代背景) 卽 「史的 諸般 素因이 철저히 고려되고 勘察되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고 理解된다.

要컨대 現代軍事戰略이란 上記한바 있는 K·F·φ·T가 總體的으로 均衡있게 잘 投入融和되어야만 名實共히 「戰略」으로서 健全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임에는 疑問할 바가 없다.

그리하여 現代戰略概念定立上的 特徵的 要素로서 다음 몇가지를 指的하는 일은 하나의 通念이 되었다. 卽 戰略이란 「꾸준한 創造的 發見」(Constant invention)이어야 하며, 諸般 不意의 可變數要因을 處理해 나가는데 있어 「洞察力과 現實的事態解決策 모색」이 重要하여 法測的 計算이나 予測優先主義는 禁物이고, 目的達成과 實現可能性間의 相互調和·均衡이 必要하고, 마지막으로 政治指導者는 軍事戰略分野에 通達해야 하고 軍略指導者는 高次元의 戰略·戰術分野에 能通해야 한다는 點이 強調되고 있다.

끝으로 韓國의 戰略概念 樹立方向을 모색함에 있어 韓國의 位置意識을 어디에서 窺見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를 간단히 요약해 두어야 하겠다. 먼저 戰略의 몇가지 類型을 考察해본다. 樹立에 있어서는 大體로 크게 두가지의 形態를 想定할 수가 있다. 하나는 世界戰略概念 全般의 스타일을 決定하는 個別自主獨立型이 있고 다른 하나는 世界戰略概念의 全般的 影響圈속에 個別戰略概念을 依託하지 않을 수 없는 依存的從屬型이라 할 수 있다. 前者는 強大國型이고 后者는 弱小國型이다. 前者는 名實共히 國防事業을 獨自의 能力으로 責任完遂하는 所謂 國際政治上的 Leader-state 或은 actor-state 의 戰略類型이다. 이러한 戰略概念은 核強大國이 指導하는 傘下 群小友邦國들에게 傳播되고 普通化되며, 따라서 群小國의 戰略概念이나 態勢整備方向은 強大國에 同化吸取되어 紐帶強化・結束의 共同名分을 찾게된다. 그리고 強大國型의 戰略概念은 集團安保體制 形成의 主導型이기도 하다. 또한 強大國型은 同類強大國間의 勢力均衡政策을 具現하는데 힘쓰며, 互惠的 協調를 通해 群小國의 個別 獨立的 戰略概念樹立에 影響力을 作用하는 同時에 強大國의 戰略概念에 同調・追從해 줄 것을 強要하는 것이다.

弱小國型의 戰略概念은 國際政治上的 이른바 receiver-state 의 戰略概念이다. 이런 類型의 戰略概念은 名分上 「自主國防」이 強調되기는 하지만 現實的으로는 政治的・經濟的・軍事的 및 外交的 諸般 局面에 있어서 「非自主國防型」임을 뜻한다.

韓國의 戰略概念도 過去에 있어서나 現在에 있어서나 現實的으로는 이 弱小國型의 범주에 속한다는 事實을 否定할 必要가 없다.

때문에 韓國으로서는 集團防衛同盟關係 및 集團安保体制의 創設을 指向하는 戰略概念을 樹立하는 努力이 바람직 하다.

특히 弱小國의 경우 그 戰略樹立을 하는 마당에 있어 軍事的 意味의 重點政策을 配慮. 實施하게 될때는 그 反射作用으로서 그 나라는 政治的. 經濟的 및 外交的으로 對外依存度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結果的으로는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國家의 政治的 獨立을 保全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獨自의 戰略態勢整備가 어려우며 가령 軍援條件. 武器體系. 兵力維持등등 他律的 制限條件 및 諸般壓力을 克服하기가 힘들다는 意味이다. (參照-David vital, The Inequality of States, A Study of the Small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d, 1967)

다음은 平和的 防禦型戰略概念을 들수 있다. 前進積極防禦戰略型 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非分斷弱小國의 拳楯는 이 類型에 屬한 다고 볼수 있다. 生存과 實利繁榮을 爲主로 하는 現狀維持型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日本의 這問의 戰略概念 및 建軍政策方向의 스타일을 想起할 수 있겠다. 비록 集團防衛體制下의 自己安全保障策을 尊重하면서도 可及的이던 核政策과 같은 「高価」의 戰略態勢整備面은 該當集團防衛體制의 主導國 (leader-state)의 責任에 依托하고, 通常軍備戰略概念은 前進積極防衛戰略을 取하면서 長期的 軍事安定과 勢力國家間의 均衡策을 圖模하는데 寄與할 수 있는 戰略概念을 樹立. 實施하는 型이다. 때문에 이런 型의 戰略概念은 自然히 政治的. 經濟的. 外交的 實利를 追求하는데 重點두게 되며 따라서 특히 外交的 意味의 free hand와 flexibility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周辺情勢 및 政治問題 해결을 위하여는 軍事的方法보다 外交的方法을 重要視하게 되는 것이 特色이다. 다만 한가지 注意해야 할 點은 平和的防禦型의 戰略概念을 國防政策의 支柱로 삼는 경우라 할지라도 武器體系 등 軍備生産水準이 無限定으로 膨脹・擴大되는 狀態에 이르게 될 때는 剩餘武器의 輸出市場 卽 武器輸入顧客國을 物色하게 된다는 보이지 않는 触媒劑 役割을 한다는 點도 一國의 戰略概念樹立에 있어서는 重要한 考慮要素임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非同盟・中立主義型 戰略概念의 定立問題를 略記해 본다. 이 戰略概念은 上記한바 있는 自主獨立型과 從屬依存型間의 中間折衝型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名實相附한 「政治的 中立」態勢가 整備되어야 하며, 이를 獨自의 能力으로 保全해 나갈만한 對內外的 與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對內적으로는 政治的인테을로기上的 明白한 敵概念을 標榜해서 는 아니되며 따라서 國民的 生存・實利・繁榮爲主의 政策實施가 要請되는 것이다. 또 兵力維持, 武器體系開發研究, 軍事財政 및 具備政策上的 諸般問題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는 「獨自의 解決能力」을 갖추어 질것을 前提的 充足條件으로 強調되는 것이다.

그런데 國力限界때문에 이들 問題의 自体解決能力이 없을 경우에는 政治的 中立을 維持한다는 것을 現實적으로 不可能한 것이며, 특히 武器體系的 維持, 保全에 있어서는 對外依存度를 全面的으로 脫皮하기란 現代的 狀況에서는 거의 不可能한 現實이다. 對外依存的 武器體系保有나 開發與件속의 非同盟, 中立型戰略概念의 樹立,

實施는 莫重한 自己負擔이 加增될 뿐 아니라 때로는 自己混亂에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大概의 경우 強大國間의 勢力均衡上 必要에 依하여 集團의 保障받지 못한 이 型의 戰略概念은 窮極의 으로 나라의 實質的인 「政治的 中立」을 保存하기 어려운 手段方便이라고 말 할 수 있다.

以上에서 韓國의 戰略概念樹立方向을 모색하기 爲해 몇가지의 戰略概念 類型을 檢討考察해 보았다.

韓國은 分斷國家의 運命속에 있으며 平和的 方法에 依한 祖國統一의 至上課業을 안고 있는 만큼 韓國의 窮極的 政治目的은 바로 이 「統一政策完遂」에 있다고 다짐 할 수 있게 되었다. 國家戰略이나 軍事戰略概念은 設定된 「政治目標」를 實現해 주는 補弼手段이라고 볼때, 韓國이 時急히 定立하여야 할 軍事戰略概念樹立은 自動的으로 明白해 진다 하겠다. 即 南北韓이 對立되고 있는 韓半島의 內在的 諸般 어려운 條件들을 克服해 낼수 있는 南北韓의 自体共同努力의 基本的 方向提示가 있어야 하며, 韓半島周邊強大國의 對韓半島政策方向의 共通分母를 면밀히 勘案해서 그것이 韓半島의 安全을 爲한 集團保障의 기틀이 될 수 있는 方向으로 活用될 수 있는 方案을 定立해야하며, 보다 重要한 關鍵은 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을 爲한 「互惠의 安保概念」을 現實로서 制度化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는 일이 「韓國의 軍事戰略概念」의 樹立을 爲한 要諦요 基礎作業이다.

4. 長期軍事安定을 爲한 戰略概念樹立上의 當面政策課題들—「戰略概念」의 定立은 곧 實踐을 爲한 理論上의 基盤이 되며 實踐의 方向感覺을 浮刻시켜주는 根柢가 된다는 뜻에서 重要하다. 以上에서 言及된 韓國의 獨立的 戰略概念 樹立方向을 모색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基礎作業의 早速한 結果를 다그치기 爲하여 다음에 擘示하는 몇가지의 前提的 現實契請條件들이 充足될 것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政治, 經濟, 外交, 軍事上의 諸般 局面에 介在하는 政策課題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특히 南北韓關係로 集約되는 韓半島의 特殊土着現實을 놓고 볼 때, 비록 그 關係가 當분간은 不得已한 體制共存關係의 制度化로 浮刻된다고 할지라도 分斷狀態가 解消되고 統一이 成就될 때까지는 對活가 계속되고 交流, 協調의 기틀이 서서히 잡혀 간다 하더라도 南北韓關係는 如前히 政治戰, 經濟戰, 外交戰이라는 「戰爭狀態」(戰爭關係)가 持續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政治戰의 次元에 依하여 性格規制」되는 軍事戰도 存続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위와같은 諸戰爭狀態에 副應한 對策을 강구하는 길은 바로 해당분야의 政策的 課題들을 해결하는 일인 것이며 이 일은 또한 戰略概念 樹立과 戰略展開에 가장 効果적인 基礎事業이라 할 수 있다.

먼저 政治戰에 對備한 政策課題이다. 이것은 對內的, 對北韓의 그리고 世界政治現實에 臨하는 政策課題로 集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對內政治面에 浮上, 提起되는 政策課題解決은 가장

중요한 比重을 占한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령 對北韓 政治戰을 想定할 경우 거기에는 外交的, 經濟的, 푸로파간다戰 등 다양복잡한 것들이 있는 것이지만 韓國民의 立場에서 볼 때 万若에 對內政治面의 諸般 政策課題가 잘 處理, 解決되지 못했을 때는 結局 對北韓政治戰의 戰略展開가 相對的으로 不實或은 虛弱해 지리라는 論理를 反論할 수 없는 때문이다.

그리고 政治戰에 對比한 政策課題 해결의 方向設定은 其他의 모든 關聯國策課題—예컨대 經濟, 通商, 軍事, 外交, 文化等—의 處理 方向을 大宗으로 指針해 주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對內的 政策課題 해결의 가장 중요한 대상문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政局의 安定을 꾀하고 社會混亂의 根本要因들을 除去하는데 있는 것이며, 公平競爭의 政黨政治의 運用을 通해서 議會機能의 增進을 向導하고, 統一을 指向하는 國民史의 試練의 核心問題가 무엇인가를 誠實하게 國民에게 說得, 啓蒙하는 課業인 것이다. 특히

國民意識構造의 前進的 總和를 期必하는 일은 어떤 다른 課業보다도 先行되어야 하는 重要課題이다. 이 課業을 成功的으로 成就하는 길은 民族的 念願으로서의 統一課業을 至上命題이지만 政治現實的으로 對內外情勢事情이 統一의 長久化 現象을 비저내고 있다는 時代背景과 歷史事實을, 國民에게 第一次的으로 啓蒙하고 說得하는 일인 것이다. 이같은 對國民 啓蒙, 說得課程에 있어서는 南北韓體制共存의

具體的 現實化政策—勿論 韓半島에 두개의 政權이 實存한다는 事實은 6·23 宣言을 통해 이미 闡明된바 있거니와—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일이 隨伴되어야 한다. 이와 同時에 政府로서는 앞으로 접진적인 南北對話·交流·交涉增進을 통해 統一의 條件이 成就될 때 「平和的 統一」의 基本方針은 確固不動한 것이겠지만, 具體的으로 어떠한 統一方式을 取하겠다는 「統一方案」을 國民들에게 提示說得해야 하는 일이다. 勿論 統一方式이라 할 때 「平和的 方法」일 경우에는 南北의 「合意」가 大前提일 것이며 統一의 形態로는 가령 「國家聯合」(confederation) 方式도 있을 수 있고 「聯邦制」(federation) 方式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여 하간 이 問題를 國民들에게 明白히 政策實踐態度로서 提示·啓蒙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言及된 「統一의 長久化現象」을 國民說得 할 수 있는 說得力의 強점을 오래 保存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政策課題들이 順調롭게 잘 해결되고 매듭지어 나가야 만 비로소 統一課業을 成就해 나가는 過程에 있어서의 政權의 實踐努力·企圖과 이에 對한 國民的 이며지가 一體感을 形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對內政策課題中에서 무거운 比重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軍隊의 精神戰力の 強度를 增進·啓導할 수 있는 重要契機이라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政治的 意味의 諸般 政策課題 해결은 對內的으로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國民總和」와 自然스러운 決算을 集結할 수 있는 것이며, 對北韓政治戰爭에 對備하는 長期戰略樹立의 基盤일뿐만 아니라 國家安全保障의 永久的 기틀을 확고히 자리잡게 하는 契機이며, 現政權史의 最大業績으로 浮刻시켜 놓을 수 있는 一大 課業이 될 것이다.

다음은 經濟分野의 當面政策 課題이다. 앞에서도 잠간 지적한바 있드시 對北韓關係의 戰略展開에 있어서 「經濟戰爭」關係는 어떤 다른것 보다는도 內國民經濟發展의 實証的 成果面에서 比較競爭이 두드러지는 分野이다. 現代의 國家安保對策이나 戰略樹立에 있어서 經濟的 要因이 가장 重要的 位置에 있으며, 實質的인 部分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나간 章節에서 이미 論及한바 있다. 한마디로 現代라는 時代背景속의 國家安保 및 戰略樹立·展開上的 要諦로서 軍事的 對策樹立 重點主義 보다는도 國內外 政治名分으로 浮刻되고 있는 國民日常生活의 安存과 福祉向上, 經濟發展, 繁榮 및 安定的, 希冀的 日常生活保障의 問題가 抬頭되고 있다는 事實을 명백히 인식하고 政策課題 해결에 集中努力할 것이 要請되고 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重要的 일은 國民經濟의 土層現況에 알맞는 發展을 爲한 「經濟政策」이어야지 經濟發展을 爲한 經濟主義」이어

서는 안된다는 점을 깊이 政策考慮해야 한다. 國民生産의 均衡的 方向定立, 施策도 重要하고 더욱 重要한 것은 国力과 國富의 國民的 均衡配分問題는 國民經濟底力の 死活을 左右하는 關鍵的 國策課題라 할 수 있다. 今世紀의 流行語라 할 수 있는 이른바 「G N P 팻시즘」의 意味가 무엇인가를 政策戰略樹立家들은 깊이 洞察해볼 必要가 있다.

現時점에서 볼때 韓國의 長期的 戰略樹立·計劃展望에 있어서 經濟的 分野의 當面政策課題는 遞減一路에 있는 軍援依存度의 效果的 克服策과 國防預算編成上的 構造, 運用, 管理改善을 爲한 最大의 效率策을 圖謀하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卽 國防費, 軍事財政預算의 最大限의 「效率的 節減策」이 圖謀되어야 하고 그 余力을 全的으로 經濟發展, 國民福祉 및 投融資方面에 돌려야 하는 것이다. 無分別한 國防費預算編成은 逆으로 國家의 租稅政策에 치명적인 타격을 招來 可能하며 나아가서는 經濟發展, 國民福祉 및 投融資政策에도 重大한 차질을 가져올 要因으로 作用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軍事分野의 當面政策課題이다. 韓國의 立場에서 보면 軍事的 當面政策 課題도 한편으로는 独自の 政策裁量에 依하여 處理되 나가야할 對內的 軍事政策課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對北韓 軍事戰上的 政策課題와 아울러, 韓半島 平和維持의 集團의 安全保障

을 如何히 獲得하고 支援을 但保받을 수 있느냐의 政策課題로 集約된다.

먼저 政策課題 해결의 基本指針이 되는 軍事政策 構想으로서 独自の 戰略概念定立이 時急한 問題라는 것은 앞에서 言及했다. 이 課題가 先決되야만 韓國의 建軍政策 一般의 方向系数를 測定해 나갈 수 있고 戰略態勢整備의 基本이 確定될 수 있는 때문이다. 軍事的 政策課題 解決의 對象되는 問題들을 우선 重要的 것들만 糸目別로 例挙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國軍戰力整備計劃 再編成課題는 質·量 共히 相對的이기 때문에 北韓의 戰力構造, 編制樣式, 武器體系, 兵力水準面에서 最大限의 均衡策이 圖謀되야 한다.

(2)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防止를 위해서 軍事戰略概念上的 互惠的 共約數를 導出確立하는 南北韓 當局의 共同努力이 切實히 必要하다.

(3) 南北韓 軍事關係를 相互均衡의인 長期軍事安定策 圖謀에 置重하는 方向으로 發展시키는 相互協力の 길이 創出, 모색되야 한다.

(4) 韓半島의 戰爭狀態 終結을 爲한 具體的인 制度化 措置가 具現되야 한다.

(5) 이를 위한 第一段階措置로서 南北韓間의 基本關係條約이 締結되어야 하여 이 基本條約에 立脚한 韓半島 平和維持原則의 共同宣言과 平和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

(6) 南北韓間의 武力不使用, 不可侵條約 및 軍事交流·協調體制를 發展增進시킬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7) 南北韓에 共通되고 있는 軍備費予算을 合理的으로 節減할 수 있는 方策이 南北共同努力課業으로 모색되고 實現되어야 하는 問題등등이다.

(8) 軍備節減을 위한 緊急措置로서 南北韓間의 段階的 軍縮協商·交涉이 制度化되어야 하고, 然後에 兵力相互均衡減縮問題라든가 또는 韓半島平和維持 共同機構 設置問題라든가 或은 軍縮實態監視機構 創設問題등 諸般 課題解決의 技術的 實質的 方案摸索이 강구되어야 한다.

(9) 마지막으로 周辺強大國에 依한 韓半島 平和維持의 「集團의 安全保障措置」가 어떤 形式으로 든지 南北韓間의 軍備協商交涉의 妥協·結案에 앞서 「先行」되도록 積極的 外交活動을 벌여야 한다.

특히 韓半島 平和維持·保全을 위한 國際保障措置를 獲得할 수 있는 外交活動展開은 南北韓間의 順調로운 軍備協商交涉을 結案促進케 하는 現實接近的 政策企圖이기 때문에 重要한 課業의 하나이다.

위의 目的을 爲한 外交活動展開의 重要對象國은 亦是 對美交涉에 重點두어야 하며 對日外交를 통한 환경여건 조성을 補完하고 中蘇에 對한 交涉活動의 길도 百方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가령 「4 大國 東北亞 安保協力會議」를 개최하도록 主張· 公용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좀더 具體的으로는 4 大國이 共同責任保障할 수 있는 「韓半島 集團安保協定」 같은 것의 締結을 促求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南北韓을 包含한 4 大國聯衛의 外相會談등의 開催를 促求하는 外交活動範域도 想定할 수 있는 일이다.

結局 韓半島의 安全 및 平和維持는 極東平和의 關鍵이요 4 大國間 勢力均衡成敗의 試金石이기 때문에 韓半島 集團安保責任措置를 強力히 내세우는 韓國의 立場과 主張과 外交活動은 名分과 說得力이 강한 것임을 自負할 수 있다.

五．韓半島 戦争状態 終結の 制度化

五. 韓半島 戰爭狀態終結의 制度化問題

- 遠東의 軍事安定과 平和建設을 爲한 第一段階措施으로서 -

1. 南北韓 軍事關係의 本質的 狀況判斷

戰後의 冷戰史를 거쳐 現今의 「協力的 平和共存時代」가 성숙해가는 時代變化에 이르는 동안 南北韓關係는 唯獨 軍事的 對決狀態로만 一貫해 왔다. 때문에 南北軍事關係의 本質的 狀況判斷 및 가치를 基礎整理해줄 必要가 있다.

가. 北韓의 軍事政策基調

먼저 北韓이 追求하고 있는 「政治目的」의 本質과 이를 美錢적으로 補充해 주고 있는 軍事政策 路線에 對하여 略述하고, 現在의 戰略指導方向을 어디에 重點을 두고 있는지에 論해서 點檢해 보겠다.

一般的으로 「政治目的」이란 政治的 美錢意志의 基本方向을 內包하는 것이다. 政治的 美錢意志의 구체적 表露은 「政策」으로 나타난다. 一國의 「政策目的」은 本質에 있어 至極히 個性的이며 同時에 自己目的的인 것이 특색이다. 때문에 對內, 外政策을 밀고 나가는 一國의 基本政策이나 區別政策은 특히 群小國의 경우에는 當該 特定 政治單位生活圈의 土着規與과 直結해 있으며 그 限界內에 通用되는 「政治目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의 政治目的」하면 그것은 北韓의 意味의 美錢的 政治意志, 政治目標가 內在하는 것으로 理解하게 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를 보면 그「實踐的 政治意志」란 金日成唯一 思想的 強制的 定立過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金日成의 實踐意志」로 代表삼을 수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實踐意志 方向은 이미 黨(北韓勞動黨) 規約. 綱領에 담겨져 있으며 이것들을 最高의 政治名分에 묶어놓은 것이 形式上으로는 北韓의 憲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政治目的」은 金日成 自身の 政綱政策 言說 및 公式化된 政策綱領과 그리고 勞動黨 規約, 北韓憲法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例로 1946年에 提示한 金日成의 政治目的을 단적으로 잘 表記해주는 出發點으로 看取할 수 있다. 卽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政治 經濟 文化 全般에 걸쳐 人民의 利益과 幸福을 爲하는 民主主義路線위에 구현되는 것이며, 尙차 朝鮮人民이 나아갈 民主主義的 路線을 명시한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政治目標를 達成하기 爲한 基盤으로서 먼저 北韓地域을 「革命基地」로 強化하고 韓半島全體(南半部解放)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에 걸친 社會主義建設의 促進이며 동시에 이들 目的達成을 爲해 南韓地域에 「革命力量」을 造成, 強化하고 궁극적으로는 強制手段에 의한 祖國統一을 전제목 하는 軍事主義 優先政策을 取擇해온 것이 지나온 4半世紀동안의 一貫된 政策態度이다. 這間의 韓國戰爭 挑發行爲는 戰爭政策 優先主義의 生々한 表証이라 할 수 있다.

上記와 같은 政治目的 達成의 實踐的 補助手段으로서 1968年에 내세운 이른바 「4大軍事路線」은 그 生命이 지금까지도 不喪의

支柱로 살아있음은 다 잘 아는 바다. 「4大軍事路線」의 眞面目은 「歴史的인 우리 党代表者會에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促進시킨데 대한 戰略的 路線貫徹에 勞働黨과 全体人民을 불러이르키면서…… 革命基地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우리黨의 軍事路線을 全面的으로 貫철할때 대한 중요한 戰鬪的 과업을 提示」했다고 宣言한데 있는 것이며 「우리의 防衛力을 強化하기 위하여는 軍隊나 人民을 政治思想的으로 武装시키는 基礎위에서 우리黨의 軍事路線을 貫철하여야 한다. 우리黨은 軍隊의 幹部化, 軍隊의 現代化, 全人民 武装化, 全國의 要塞化를 軍事路線의 基本內容으로 規定」했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北半部를 政治. 經濟. 軍事적으로 튼튼히 다져진 不敗의 革命基地로 轉變시키며 다가오는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變을 主動的으로 準備있게 맞이하는 길」이 바로 「4大軍事路線」임을 특히 強調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路線은 궁극적으로는 「南朝鮮解放革命鬪爭」의 基礎를 다지는 일에 重点目標을 두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戰爭에서 人的 要因과 物的 要因 政治思想的 要因과 軍事技術的 要因이 되는 역할에 對한 精確한 評價와 올바른 認定은 軍事路線作成에서 原則的 意義를 가진다.」라는 點을 再三 強調했다. 그리하여 北韓은 基本的으로 戰爭方式의 取擇에 있어서는 毛澤東派의 이론바 人民戰爭方式을 取하고 있으며 따라서 戰爭遂行(革命鬪爭)에 있어서는 政治思想的 要因 即 「精神戰力」의 重要性을 특별나게 強調하는 것인데 이점에 있어서도 物量, 技術, 科學戰力을 爲主로 하는 이론바 西方世界의 國民戰樣式과

對照的이다.

1973年2月 北韓「人民軍」副設 25周年紀念行事에 際하여 吳振宇人民軍總參謀長의 報告演說에서 「4大軍事情略을 기본적으로 하는 北韓勞動黨의 自衛的 軍事情略은…… 現時代의 要求와 革命戰爭의 歷史的 經驗과 現代戰의 特性을 科學的으로 分析함에 기초한 가장 正當한 路線이며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綱領」이다. 라는 點과 「人民軍隊는 政治思想의 軍事情術的으로 준비되고 主體的인 戰法으로 武装되어 有事時 임의의 職務도 담당할 수 있는 幹部軍隊로 자라나 人民軍隊를 핵심으로 하는 위력있는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制가 확고히 樹立되었다.」라고 闡明했다. 이는, 모두 「北韓의 政治目的」달성을 위한 不變의 實踐的 手段으로서의 軍事情能, 目的을 明示한 것이라고 擧取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政權生長背景史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一貫的으로 政治目的 達成의 軍事的 實踐手段을 가장 重要視해 왔음을 自弁하는 疑念을 否認할 수 없게 됐다. (參照 이 대목은 筆者稿 「北韓의 政治目的 手段으로서의 軍事情能」, 北韓誌, 73年6月號 收載 및 抽稱 「北韓의 軍事情策路線에 關한 研究」, 研究論叢第13號收載, 國際問題研究所刊, 71年7月) 그리고 보면 현재 交涉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所謂 8.28 金英柱聲明) 南北對話가 進行中에 있는 마당에 있어서 적어도 上記한 바와 같은 「北韓의 政治目的」이 어떤 本質的인 變質 轉換의 徵兆가 없는 限에 있어서는 南北對話가 갖는 基本目標는 結局 韓半島의 戰爭防止를 爲한 緊張高潮狀態의 一時的 源結 以上을 期待하기 힘든 것같고 나아가서는 祖國統一이라는

民族의 大課題이 遂行될 앞으로의 民族史의 試鍊過程은 南北韓間의 오랜 政治戰爭을 치루어내야 할 二元的 「戰爭狀態」(The state of war)의 葛藤史로 點綴될 公算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示唆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北韓은 비록 그 基本政治目標을 上記한 바 대로 이거니와 애당초 南北對話事業에 臨하게 된 것도 今日的 世界政治情勢 動向推勢가 어쩔수 없이 北韓으로 하여금 從來의 政策態度轉換을 動機賦與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根烈한 反美, 反帝 鬭爭路線을 固守해온 中共이 現時代에 알맞는 諸般 利益追求를 爲해 最近 年間に 對美, 對日, 對UN政策 態度等을 바꾸어 國際關係 改善의 實踐方案을 探索, 具現하기에 이르른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도 現實適應을 爲한 政策態度變質로서 南北對話의 始發에 同調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北韓은 그동안 여러 機會를 利用하여 南北統一이라는 이름의 大命題를 내세워 南北韓關係에서 定立 處理되어야 할 問題들을 主張 또는 提議해온바 있다. 그것들을 綜合해서 玆까지로 묶어보면 우선 政治協商提議를 通해서는 「聯邦制」의 實施와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提議하고 있으며 軍事의提議로서는 駐韓美軍의 撤収와 南北軍備縮小 및 武力不使用約束, 그리고 南北 雙方의 軍事費負擔遞減을 爲한 共同協議作案이 時急함을 強調하고 있다.

특히 北韓의 경우 軍備費負擔의 심각성은 짐작될만 하다. 그것은 最近 3年동안의 北韓의 國防費豫算의 推移를 보면 가령 71年度의

경우 總歲出에 對한 國防費는 31%이던 것이 72年度에는 17%로 줄어 떨어졌으며, 73年度豫算案에서는 國防費를 總豫算歲出規模의 15%로 策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反面에 「人民經濟費」의 경우 72年度에는 總歲出의 57.3%였는데 73年度에는 58.4%를 占하고 있다. 적어도 數字上으로는 「人民經濟費比」는 增加했고 國防費比는 減縮傾向을 보여준다.

向後 南北韓關係의 경쟁상태는 現在의 國際的 情勢變動與件을 勘案할 때 軍事的 側面보다 經濟的 경쟁상태의 実績評價問題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展望되는 形便이고 보면, 北韓의 위와 같은 人民經濟發展에 投入하는 豫算比重과 國防費 節減傾向은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道閭에 金日成 自身이 여러번 그들의 國防費負擔過多가 所謂 「人民經濟發展」에 주는 영향이 莫重함을 爽吐한바 있듯이 저들이 削減된 만큼의 豫算額을 계속 그들의 人民經濟發展에 投入援用할 것으로 計算할 때 結果的으로 그들의 經濟成長 態도를 加速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相對的으로 우리의 對北韓 「經濟戰爭」에 있어서의 重大한 차질이 생길지도 모를 可能性을 충분히 想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韓國의 戰力構造改編上の 諸問題

韓國의 國軍戰力構造의 存在樣態는 建軍以來로 美國의 對韓軍事政策패턴에 依하여 決定돼 왔다. 그 美國의 對韓軍事政策은 또한 北韓으로 부터의 武力威脅을 防除할 만큼의 水準에서 政策考慮

(軍援政策)해왔기 때문에 韓國軍戰力構造패턴도 自動的으로 北韓의 그것과 相對的인 位置에서 存在해 왔다. 戰力構造의 핵심은 兵力構造, 武器裝備體系, 軍事財政面으로 集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北韓의 軍事力과의 相對的인 位置로서의 韓國의 軍事力은 特定裝備基準에서 볼 때 北韓軍事力보 劣勢이다.

가령 空軍力 陸軍裝備, 高速艦艇面에서 특히 그렇다.

다음은 英國의 73~74年度版 「밀리타리 발란스」가 내놓은 南北韓 軍事力 關係를 比較檢討해 본다.

	單位	韓 國	北 韓
兵 力	名	633,500	470,000
砲 砲	門	1,000	6,200
空軍 미사일	大隊	3	20
中 型 戰 車	台	750	1,030
潛 水 艦	隻	0	3
驅 逐 艦	隻	12	0
高 速 艇	隻	0	158
輸 送 船	隻	26	0
戰 鬪 機	台	195	598
輸 送 機	台	35	79
헬 리 콧	台	15	20
準 軍 隊	名	2,000,000	1,500,000

勿論 戰力比較라는 것을 「數值上」의 比較만으로는 眞面目을 把握하기 힘든 것이지만 어떻게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兵力數를 除外하고는 砲, 米사일, 戰車, 高速艇, 戰鬪機등등에서 北韓軍事力은 韓國보다 優勢함을 示現하고 있다. 덧붙여서 北韓은 射程距離 26 마일의 地對地(SS)로켓인 FROG.5 및 FROG7 型까지도 3個大隊나 導入創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어도 武器裝備體系의 基準에서 볼 때는 위와 같은 數字上의 南北韓 「不均衡狀態가 현저한데도 不拘하고 韓國戰爭以後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韓間 軍事關係가 結果的으로는 一種의 「競争的 均衡」 狀態를 維持해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美·蘇의 對韓半島 軍事政策上의 戰略的 次元의 諸般 背景與件을 안고 있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半島의 南北韓 軍事關係는 결코 「南北韓 一對一基準으로만은 戰略的 次元의 說明이나 現實把握이 어렵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韓國의 國軍戰力成長史는 大體로 크게 나누어 3期로 區分하여 特徵을 發見할 수 있는데 그러한 特徵은 모두 美國의 對韓 軍事政策 實施의 試行錯誤的 結果事項임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第1期는 建軍以來 韓國戰爭發生 以前期間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 第2期는 50年代初의 韓國戰爭遂行期間으로, 그리고 第3期는 韓國戰 以後 現今까지를 總括할 수 있겠다.

위의 第1期는 두말할 것도 없이 美國의 對北韓政策判斷의 錯誤로 말미암아 南北韓間의 戰力構造 軍事力一般의 意味로서 一面에 혹심한 不均衡事態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것은 韓國戰 發勃當時의 南北韓 戰力比較를 想起한다면 自명한 일이었다. 第2期 동안은 戰爭期間이었는데 이때는 美國의 韓半島軍事作戰上 地上兵力의 「現地需給」

이라는 戰略的 要請 때문에 韓國陸軍兵力은 一時에 엄청난 水準으로 팽창한 동안이었다. 그리고 海空軍 戰力은 거의 完全히 對美依存할 수 밖에 없는 狀況속에 戰爭이 遂行됐다.

第3期는 休戰後 오늘에 이르는 동안을 말한다. 이 동안은 南北韓國의 軍事的 競爭狀態의 「戰略的 均衡」을 圖謀한 時期라고 말할 수 있으며 北韓이 統一政策路線實踐의 手段으로서 軍事重點施策을 펴대 왔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韓國도 對北防衛力增進策을 圖謀하는 일이 現實的 要請이었다.

그리하여 現在는 韓國軍 近代化 5 個年計劃이 推進實施中에 있고 基礎的인 軍需產業의 育成을 爲한 計劃이 實施(M·16小銃生産工場等)中에 있다.

그런데 國軍現代化計劃은 必然的으로 國軍兵力水準의 再調整·予算負擔의 合理化 및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問題와 直結되는 것이다. 71년부터 75년까지 5 個年 동안에 15%의 美國援助로 實施될 予定의 國軍現代化計劃은 美軍撤收에 對備하고 北韓으로부터의 威脅에 對処하기 爲한 軍事力을 保有할 目的으로 推進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現代化計劃을 통해서 特別 武器體系·裝備面의 種·量限界를 어디까지 設定해서 目標達成할 것인가의 問題는 全的으로 美國의 對韓半島 軍事政策 및 戰略展開의 方向定立에 依拠하여 決定될 問題이기 때문에 적어도 韓國獨自的인 能力으로 北의 現軍事力水準의 威脅을 除去할 수 있는 陸軍裝備·空軍力·高速艦艇등의 導入保有물 拂하는 일은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韓國이 獨自能力으로 위

와 같은 武器・裝備面의 對北均衡을 具現하려던 그 軍事費負擔의 엄청난은 곧 韓國의 經濟發展에 重大한 威脅이 介在함을 否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國軍現代化計劃이라는 것은 結局 美蘇(中共포함)의 對韓半島 政策上 여한 경우라도 韓半島에서의 作戰概念不擴大(局地 限化)原則에 따른 南北韓軍事戰力の 「戰略的 均衡」以上도 以下도 아닌 線에 묶이게 될 公算이 큰것 뿐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韓國으로서는 早速히 独自の인 戰略概念을 確立해서 建軍政策의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여 實踐해 나가는 것이 緊要하다.

韓國戰 以來를 地上兵力의 現地需給任務때문에 韓國은 陸軍第1主義를 取해 왔고 이의 維持를 위하여는 對美軍援依存度を 계속 높여왔기 때문에 最近年間に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의 對韓軍援規模가 계속 下落해 가는 마당에 있어서는 비록 「軍援國防」에서 「自立國防」으로 轉移하고 있다는 各分論은 몇몇한 것이지만 軍援이 下落 乃至는 終結될 경우의 韓國의 國防費財政負擔度는 더욱더 上昇하게 되며 國防費의 自立度가 上昇한다는 말은 그만큼 韓國의 財政自立度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國民租稅率・國民經濟開發財源・國際收支・外債元利金 償還負擔 등에 直結되어 나갈 것이며 아울러 軍事財政負擔能力에 重大한 壓迫을 加해 주게 될 것이다.

實質적으로 一例를 들면 FY73의 總國防費預算規模의 編成構造를 볼 때 軍事戰力構造의 中樞는 戰鬪裝備라 할 수 있는데 總國防費 1천 8백 59억원中에 軍事施設·戰鬪裝備 및 作戰經費 등은 겨우 4백억원線에 不過한데 이는 總國防費의 21.5%에 해당한다. 따라서 俸給·年金·給食·被服·部隊個人維持費 등등은 平均 約 80%를 占하는 꼴이 된다. 더우기 FY72를 基準해 보면 過去 5年間의 國防費年平均增加率は 約 27%인데 FY72年度 予算만 보더라도 內國稅 增率은 27.7%이고 國防費의 前年比增은 27.2%였다.

한마디로 위와같은 軍事財政負擔率의 韓國 國民經濟에 미치는 圧迫과 波及效果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韓國의 戰略概念·建軍政策·軍備政策上의 諸般 課題가 時急히 解決해야 하고 특히 國防予算編成上의 「重點主義」 및 効率化問題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南北韓 戰爭狀態 終結措置의 意味賦與

韓半島에서의 「戰爭狀態」를 終結措置한다는 것은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爲한 「制度化」의 第1段階 措置이다.

그런데 尙今 韓半島 좀더 具體的으로는 南北韓關係는 事實上 (de facto) 의 平和狀態이고 法律上 (de jure) 의 戰爭狀態라 할 수 있다. 「法律上の 戰爭狀態 (de jure war)」는 韓半島 平和의 制度化를 阻害하고 있으며 「事實上の 平和狀態 (de facto peace)」에로의 復歸는 未解決問題이다.

現在 韓半島에서의 「法律上の 戰爭狀態」를 말해주고 있는 制度的 存置與件은 다음과 같은 것 들이겠다.

1. 南北韓基本關係의 未定立 이는 南北關係의 形式上 「敵對關係」를 意味한다.
2. 休戰協定의 存続
3. 軍事停戰委員會 存立
4. 中立國休戰監視委員團의 存置
5. UN軍 — 實質的으로는 駐韓美軍 — 및 UN軍司令部의 健在
6. 軍事交渉當事者群 — UN軍司·朝鮮人民軍司令官·中國中央政府義務軍司令·大韓民國軍事停戰委員會代表 — 의 會議體 (停戰委員會) 存続등등이다.
7. 統一과 復興을 支援해줄 目的으로 UN機構인 UNCURE 가 있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上記한 「法律上の 戰爭狀態」는 어떤 形式으로든지 「事實上の 平和狀態」에로의 合理的 制度化를 要請하고 있다. 形式的 戰爭未終結 狀態를 實質的 平和狀態로 回復轉換措置가 必要한 때문이다. 平和狀態의 制度化를 爲하여는 1次的으로 「南北 雙方의 合意」에 依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南北韓이 포함된 休戰調印當事國들 間에 이루어지는 戰爭當事者 「雙方의 合意措置」로 매듭지을 수도 있다. 다만 南北韓戰爭狀態終結의 制度化措置를 爲한 具體的이고 事實上的 當事者는 南北韓 政權·政府當事者間의 「交涉事項」으로 圧迫돼가고 있다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저 「七·四南北共同聲明」이나 或은 이것에 根拠해서 만들어진 「南北調節委員會」의 存置는 韓半島에서의 戰爭防止와 統一의 定礎作業을 爲해 南北韓間의 「交涉對話」를 통한 共同努力의 더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南北韓關係의 戰爭狀態 終結과 韓國戰後現狀維持(New States quo Post bellum)을 爲한 基本關係를 規律定立하기 爲해서는 우선 南北韓 基本條約締結이 必要하며 이 基本條約에 準據하여 平和協定の 締結도 隨伴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南北韓間의 基本關係가 處理結論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韓半島問題解決의 本質的 계속처리사항으로서 武力不行事·不可侵條約 締結問題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南北軍備均衡策의 一換으로서 軍備協商·交涉의 問題가 介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對한 우리측의 對端方策·復案構想이 미리미리 잘 짜 놓아야 할 것

이 要請되고 있다.

이와같은 南北關係의 對備方策・國策研究를 爲한 一元化된 制度機
構로서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을 効率的으로 活用할 必要가 있
는 것이다.

3. 平和協定締結上の 原則과 前提要件

몇가지의 大綱原則과 前提의으로 充足되어야할 條件들이 留意되어야 한다. 即

1. 韓半島의 平和維持・保全을 爲해 南北合意에 依한 「共同監視・協力機構의 創設을 圖謀하고,

2. 韓半島 平和와 安全의 4大強國에 依한 國際的 共同集團保障措置를 成就할 수 있는 南北共同合意追求

3. 南北韓 軍備均衡의 方向設定에 關한 交渉・合意. 이 문제는 平和協定締結當時基準의 雙方 軍備凍結・軍備縮少作業의 雙方 個別的 裁量實施原則 尊重의 諒解・合意, 그리고 韓半島의 長期的 軍事安定策 圖謀을 爲한 互惠實利의 安保概念 創出定立을 通해 軍備競争原則의 相互自制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4. UN自體의 措置에 依해서 名目上의 「駐韓UN軍」이 解体된다 하더라도 「駐韓美軍」은 「韓美防衛條約上의 對象問題임으로 南北交渉上의 學論議題로서는 可及的 除外되어야 하며

5. 駐韓美軍의 存在役割은 韓半島에서의 強大國間의 勢力均衡을 保障해 주는 상징적 安全弁으로 作用하는 때문에 駐韓美軍의 계속 駐屯 或은 撤収與否問題는 北韓의 軍事政策態度를 修正・變改하게끔 하는데 十分 活用해야 할 것이다.

6. 平和協定締結時期는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이 決定・實現되기 以前에 妥結보도록 韓國政府가 先導主動役割 해야 하며

7. 國軍現代化 5 個年計劃도 南北平和協定の 締結以前에 完結보도록 時限短縮을 爲한 對美交涉活動이 必要하다. 이는 南北이 平和協定을 일단 締結하는 마당에 있어서 「軍備增強」의 名分이 弱해질 뿐 아니라 必然的으로 提起될 南北韓 軍備凍結措置 合意에 事前對備하는 最少限의 均衡策圖謀의 一環이기 때문이다.

8. 南北韓間의 基本條約이나 平和協定締結에 있어서 戰後의 條約體系가 보여주고 있는 先例가 許用함을 勘案하여 南北韓 雙方이 各其 締結하고 있는 既存條約體系나 防衛協定등은 모두 南北交涉過程에서 論外로 하는것을 基本方針으로 삼아야 한다.

위와같은 原則的 問題나 前提의 條件充足을 爲한 雙方의 實質的 努力의 結果로서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他律的 條件에 依하여 強要된 協定보다는 훨씬 効果의 일 수도 있다.

即 平和協定の 締結은 戰爭終結을 爲한 강화조치이며 따라서 *de facto peace* 와 *de jure peace* 를 爲해 同時的인 基盤 마련이 되는 것이다. 또 雙務的 基盤의 戰爭狀態 終結의 制度化措置(協定·條約等)는 相互拘束的인 強度가 큰것이며 法律的 効力도 比較的 安定的일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國의 平和協定은 韓國戰爭의 「戰前狀況復歸」(*status quo ante bellum*)이 아니라 韓國戰休戰以後의 國內外狀況變化에 따른

事實關係를 現實接近의 方法에 依하여 處理해 나간다는 基本方向定
立이 必要하며 따라서 「새로운 戰後(韓國戰) 現狀維持」(New
status quo post bellum) 秩序를 創造構築하는 일에 重點을 두
어야 하며 새로운 秩序與件에 副應한 「平和狀態의 再建確立」
(Re-establishment of state of peace)이 緊要한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間에 平和協定이 일단 체결 發効되면 이에 對한
第3國의 介入은 事實上 어려워진다. 또 當事國間의 變務의 合
意에 依한 協定·規案은 國際法 一般原則上 相互拘束的인 強制法
(Jus Cogens)이다. 이러한 jus cogens는 他條約이나 協定에
優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南北韓間에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그것은 現休戰協定에 代替되는 jus cogens가 될 수 있는 것이
며 따라서 南北韓 雙方이 他國과 맺고 있는 條約이나 協定에
拘碍될 것 없이 南北韓間의 平和協定이나 其他條約은 그것대로 獨
立條約體系로서 運營할 수 있는 根拠를 갖게되는 것이다.

平和協定の 締結은 南北間의 「軍事關係」를 政治的 平和維持關係
로 轉換시키는 制度措置인 것이며 提起되는 軍事上의 諸般問題를
高度의 政治的 次元에서 合理的 解決方案을 모색가능케 하는 途徑
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平和協定 締結을 爲한 必要期間의 南北交涉·會議外交가
必要한 것인데 이같은 過程을 通해서 現存休戰協定·軍事停戰委員會
·中立國休戰監視委員團 및 駐韓外國軍問題등은 締結될 平和協定속에
吸收할 것은 吸收하고 廢棄·調整 改編算事는 附屬議定書를 作成하

여 處理하는 方向을 取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말했지만 駐韓美軍의 在在는 韓半島에서의 勢力均衡 및 體制共存을 保全해줄 担保役割이고 政治象徵的 存在라는 點을 強力히 밀고 나가면서 北韓의 名實相附한 平和政策의 實踐姿勢를 定着케 하는데 하나의 關鍵으로 授用해야 할 것이다.

六：極東地域의 軍事長期安定化方案으로서의
南北韓 軍備協商 (軍縮) 問題

六. 極東地域의 軍事長期安定化 方案으로 서의 南北韓軍備協商(軍縮)問題

「아나톨·라포르트」(A. Rapoport)는 그의 「平和研究方向指針」(Directions in Peace Research, Scandinavian University Books, 1968)에서 世界軍備問題를 論及하는 가운데 「軍備競争의 自己持續的 性格은 이미 紀元前 5世紀의 옛날에는 「쓰키디데스」(Thucydides)에 依하여 洞察된바 있다. 그는 「스팔타」와 「아테네」간의 相互의 공포가 서로의 疑惑을 深化하여 軍備를 增大했고 그 結果 戰爭이 勃發했다」고 論한 故事를 引擧했다. 하거나 「로마」의 軍略思想家인 「베게시우스」(Vegetius)가 「平和를 顯하거든 戰爭을 準備하라」(is vis pacem, para bellum)고 論한 것은 軍備競争의 本質의 일단을 明確하게 말해준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클라우제비츠」(von Clausewitz)는 그의 「戰爭論」에서 軍事論理의 이론바 「兩極化原理」(Principles of Polarity)를 創出해 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라포르트」는 다시 그의 「一般意味論」(Science and the Goals of Man-A Study in Semantic Orientation, 1950)을 通해 특히 軍備競争問題와 關聯해서 「雙方」의 意見이 不一致했을 때 생겨나는 結果事項을 다음과 같이 舉例한다. 卽 「두사람의 政治家가 論爭을 하고 있다. 한사람이 #우리들은 平和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웃나라는 戰爭을 開始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저 軍備를 똑똑히 보라」라고 다른 한사람은 「平和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쪽이다. 그대들은 죽업의 商人이다. 저 軍備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들은 結局 彼此가 平和를 目標指向하고 있다는 事實을 證明하기 爲하여 軍備를 계속하고 平和를 手中에 넣기 爲하여는 더욱 軍備를 強化해야만 한다고 宣稱하는 꼴인 것이다. 軍備強化를 爲한 競争은 相對的인 것이므로 雙方의 満足할만한 軍備水準에 到達한다는 것은 理論上 無限定한 것이며 이같은 競争이 계속될 경우 軍事論理上의 唯一한 平和保全의 길은 「戰爭을 이르는 것」에 歸着되는 것이겠다.

軍備競争을 止揚하고, 世界平和維持와 軍備縮少의 必要性을 明文으로 規定한 저 國際聯盟規約은 人類의 平和維持努力의 20世紀의 歷史産物이었다. 進一步하여 今世紀의 國際聯合憲章은 國際平和와 安全의 維持保障을 爲해 人類念願의 예지를 集約해 놓았지만 國際聯盟 以來의 世界政治史를 계속적인 軍備競争史로 一貫해 왔고 大小戰爭事端의 點綴史였다.

其矣 國際聯合憲章은 國際平和와 安全維持에 關한 主要責任을 UN 安全保障理事會에 試果했지만 이 경우 「軍備縮少精神」보다는 차라리 「集團安全保障精神」이 보다 重要視되고 있을 따름이다 (參照, 憲章第11條1項・第26條・第43條 및 第47條 各各).

이와같은 現今世紀의 분위기 속에 UN을 통한 諸種 軍備縮少案・軍備管理問題들이 無數히 提唱되고 案으로 提起되고 決論案이 提出되고 方法이 모색되 왔기는 하지만 겨우 1972年末의 美・蘇間

「戰略核武器制限協定(SALT)」의 締結成功을 除外하고는 軍備協
定이 結實된 것은 皆無하다. (參照 SIPRI Yearbook of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s 1968/69, 1969/70: 軍縮問題資料
集 1945-1968, 前田 壽編著 1968 年刊 東京)

韓半島의 軍備縮少問題는 極東地域의 平和維持와 長期軍事安定化
方案의 具體的 手段으로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南北韓
軍備縮少의 必要性·方法論·問題點등을 다루기에 앞서 韓半島(南北
韓)에 알맞는 軍事力의 類型定立을 爲한 予備考察일 수 있는 現
代的 軍事力 概念의 大綱을 點檢해 두는 것이 必要하다.

1. 現代的 軍事力(概念)의 數型的 区分

現代프랑스의 軍略家의 한사람인 「갈라」장군은 그의 「核兵器와 戰略」(參照 「非核國家에 있어서의 軍備의 意義와 役割」·明地 丸 所論·國防誌 3月号에 所収)에서 現代軍事力을 3大類型으로 分類考察했다.

第1카테고리는 오직 美·蘇만의 軍事力을 指稱하였는데 그 役割·機能으로서

1. 美·蘇는 超強大核戰略能力(第1·第2打撃戰力 能力兼備포함)의 唯一한 保有國이며
2. 自國의 直接的 安全保障 目的의 外國軍事力介入이 可能한 나라이며
3. 美·蘇雙方은 直接衝突을 피한다는 條件下에 互惠의 利益保全에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第3國을 犧牲으로 하는 在來式 戰爭方式을 取扱하는 때문에
4. 兩超大國은 自國의 死活問題와 決定的 利害關係打算에 있어서는 對立하지만 第2카테고리 以下國 問題에 對한 政策態度에 있어서는 自國의 「絶對的 聖域化」를 前提로 共通分母를 갖고 있고
5. 따라서 美·蘇의 共通諒解 없이는 第2 카테고리 以下諸國이 結束聯合하여 國外에의 武力介入은 絶對不可能한 것임을 論破하고 있다.

다음 第2카테고리에 屬하는 軍事力에 關하여는 獨自의 能力으로

自國領土防衛가 힘든 나라임을 前提하고

1. 自國領土 밖에서 軍事的 모험을 벌일만한 軍事實力을 保有하지 아니하며 (現在로서는 英·仏의 경우를 指稱)
2. 오직 自國領土에 對한 核威脅을 防除하고 自衛정도의 미약한 核能力의 保有國家이며
3. 비록 核保有開發增進을 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根本目的은 自衛와 國家의 威信을 確保하기 爲함이며 通常武裝力의 保全은 核戰爭抑止效果를 지키기 爲함이며 國外的 武力介入을 爲한 武裝增大는 너무도 高價의 事業인데
4. 超大國끼리는 第2카테고리 以下諸國의 行動自由를 規律하는 爲문에 結局 이들 第2카테고리에 속하는 諸國은 美·蘇兩國의 祭物되는 경우가 許多한 것이므로 什불리 모험을 試圖해서는 아니되며
5. 특히 第2카테고리 以下諸國에게는 이미 「戰爭은 他手段에 依한 政治(政策)의 延長·계수이다」라는 原則은 適用될 수 있으며
6. 他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모든 問題의 解決을 爲하여는 武力에 依한 呼訴가 아니라 政治的 行動으로 해결하는 方法을 모색하는 眞만이 가장 重要한 課業으로 남는다는 事實을 看被하고 있다.

결므로 第3카테고리에 屬하는 軍事力群으로서는 核武裝能力에 없는 나라를 말하며 通常武裝國을 通稱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1. 上記한 第1카테고리國의 介入에 依하여 運命이 決定되며
2. 다만 第1카테고리國이 第3카테고리 國群問題에 對하여 軍事的 最大介入하는 일은 制限要素가 많은 것인데 가령 既往의 韓國戰爭이나 越南戰爭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3. 第3카테고리國이라는 東西陣營의 어느 한쪽 陣營에 全적으로 加担하여 自己運命을 依託하든지 아니면 戰略環境上 엄정 중립의 貫徹이 許容된다가 하는 경우를 除外한다면 美·蘇雙方의 相互尊重에 依한 裁量에 따라서 第3카테고리國의 生存範圍는 保障되는 것이 普通인데
4. 第3카테고리國은 單一大國勢力圈에 從屬되든지 아니면 複數大國勢力의 保障體制에 依存하든지 間に 如何한 경우라도 어느程度 國家의 自由行動의 自制와 양보를 強要받는 것이 第3範疇國의 宿命이라고 看被하면서

오늘날의 通常武力의 意義와 機能役割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集略하고 있다.

1. 局地制限戰鬪
2. 戰爭抑止力을 効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手段
3. 同盟國軍事力の 總體的 實力發動의 一環(全體의 一部分)으로서의 機能
4. 防衛的 軍事力の 主軸으로서 機動戰鬪師團·地上兵團·戰術空軍 및 沿岸防衛海軍力の 編成을 中心으로
5. 地上戰鬪를 爲한 主武器로서의 戰車의 効用價值를 重要視하

게 되며

6. 自走砲・重砲兵器 確保가 緊要하고
7. 戰法 兵器開發・幹部要員 訓練・戰略概念確立의 問題가 가장 重要한 課題解決의 焦點을 強調했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에 따를것 같으면 現代軍事力의 類型中에서 韓國的 軍事力의 位置 定立은 第3카테고리에 所屬되어 있는 것이 現時點의 正直한 自己意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勿論 北韓의 경우에도 例外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韓半島의 경우 南北韓이 共히 스스로의 運命을 開拓해 나가는 第一線 責任群象들인 政治家나 軍事政策 當路者들은 韓半島의 軍事力의 實數値가 現世界政治・軍事秩序에 있어서 무엇을 意味하는지를 正確하게 洞察하고 把握하여 韓半島實情에 맞는 戰略概念・兵力水準・戰術戰法・武器體系・軍事制度・軍編制樣式・動員體制・兵役制度 등등의 諸般 分野에 걸친 「獨自의 個性確立」을 成就하는 것이 責任과 使命完遂의 지름길인 것이다. 이같은 責任賦果中의 가장 時急한 當面課題가 南北韓의 軍備縮少問題를 成功的으로 完結하는 일인 것이다.

지금 第3카테고리에 所屬된 國家群 뿐 아니라 超大國은 超大國대로 第2카테고리國은 그들 나름대로 70年代의 軍事的 課題解決을 爲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關해서 진지한 努力이 傾注되고 있음을 非常한 關心으로 注視해야 할 것이다. (參照 #The US Military: Patterns of Adaptation For the 1970's by Terry J. Busch and Ronald J. Stupak, in ORBIS, Winter, 1973: 西獨 및 프랑스의 1972年度 「國防白書」 등등)

2. 南北韓間의 軍備縮少 協商方案

現今의 軍備協商은 二邊變務的 (bi-lateral bases) 底邊構案이 前提될 때는 協商·交涉의 進行이 比較的 順調로울 수 있으며 複數國家間의 集團의 措置로서의 軍備協商交涉일 경우에는 利害關係의 調整이 複雜·다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交涉의 妥結은 至難하고 長期化傾向을 免키 어렵다. 前者의 경우는 適間의 SALT를 標本의으로 舉示할 수 있고 後者의 경우는 유럽에 있어서의 「相互均衡兵力減縮」(MBFR)의 問題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단 순히 理論上으로는 「南北軍備縮少協商」도 比較的 順調롭게 妥結될 수 있는 展望이 반드시 非線的인 것만은 아니다. 아직은 協商의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애당초 協商·交涉을 필립만한 政治的 與件이나 制度的 準備이 成熟되지 못한 狀況이므로 交涉進行의 具體的 方法論을 提起할만한 時期與件이 아닌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軍備協商의 한 「패턴」으로서의 上記한 MBFR는 비록 그것이 아직은 予備會談정도의 進陟過程에 있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合理的인 方法論의 모색과 基本的인 問題點은 充分히 浮刻되고 있는 實況이다. 때문에 먼저 MBFR가 안고있는 몇가지 基本的인 問題所在을 略記해 두므로써 장차의 南北韓 軍備協商·交涉에 臨할 우리의 基礎作業을 遂行하는데 參考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本是 MBFR는 1956년부터 蘇聯이 中心이된 「와르샤와」 條約樣 體가 提唱해온 이른바 「全유럽安保會議」(European Security Conference) 開催提議에 對한 「카운타·부르포잘」로서 1968年 6月·

NATO關係理事會가 「와르샤와」條約機構에 正式提案되면서 東西軍縮協商의 交渉이슈로 脚光을 받게된 것이다. 몇차례의 予備交渉・接觸을 통해 70年6月・「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와르샤와」條約機構會議가 「全유럽安保會議」에서 다루자는 條件附回答을 한데 뒤이어 71年4月・第24次蘇聯共產黨大會에서 「부레즈네프」가 會議開催 用意있음을 公式發說하게 됐고 「유럽安保會議」와 MBFR를 分離討議하자는 修正提議까지 내게 되므로서 會議展望은 成熟해 갔다. 그리하여 72年 11月 15日・NATO側에서 MBFR會議開催에 關한 對와르샤와側 招請狀을 發付하게 됐고・72年 11月 21日의 「헬싱키」의 「全유럽安保會議予備會談」과 함께 73年 1月末에는 MBFR予備會議開催에 合意確定을 보았으며・1973年 5月 16日에 「비엔나」에서 MBFR予備交渉全體會議가 開催된바 있다. 會議構成 正式멤버로는 NATO側의 美・英・西獨・カナダ・和蘭・벨지움・룩셈부르크등 7個國이며 와르샤와側의 蘇・東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등 4個國으로서 都合 11個國인데 여기에 會議에서의 發言權은 있으나 議決權이 없는 옵서버國으로서 「이탈리」・「터키」・「그리스」・「노르웨이」・「데마크」(以上 NATO側)와 「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以上 와르샤와側)등 8個國을 포함한 全 19個國이다.

그런데 지난 5月の 비엔나會議때는 NATO~와르샤와側 雙方의 意見を 折衷勸案했다고 볼 수 있는 옵서버國인 「루마니아」가 MBFR會議를 爲한 具體인 議題를 提案한바 있는데 이것은 MBFR

가 겪어야 할 課題解決의 核心이 무엇인가를 짐작하는데 重要な 參考事項이 아닐 수 없다. 卽

1. 全外國軍撤收를 궁극목표로 하는 兵力減縮의 問題
2. 外國軍事基地의 解体問題
3. 外國國境沿邊에서의 示威目的으로서의 軍事演習 및 兵力集結의 停止問題
4. 軍事予算削減의 問題(이 問題에 關해서는 最近 - 9月 25日 蘇聯의 「그로미코」外相이 UN總會演說을 通해 美·蘇·英·프랑스 및 中共등 安保理 5大常任理事國들이 自發的으로 自國의 國防費의 10%를 削減하여 이를 開發途上國에 援助해 주자는 提議를 한 것과 關聯시켜 볼 때 매우 注目을 끄는 MBFR의 議題選定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核保有國의 保障下에 歐洲各地域에서의 非核地帶 設置問題
6. 軍備擴充競争中止問題
7. 各國 軍備削減縮
8. 東西軍事블럭 除去努力 등등이다.

그런데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東西(N.A.T.O側과 와르샤와 條約機構間)軍事力配備는 적어도 數字上으로는 「全般的 不均衡狀態」인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相互均衡兵力減縮」하자는 交涉·會談議題 속에는 MBFR 그 自体의 本質的인 基本問題點이 未解決된채 會談이나 交涉에 臨하게 되 있는데 이것들을 綜合的으로 集約點檢하면

東西戰團部隊 및 軍事戰力 比較表

(南歐・中歐・北歐配備)

	N A T O	와르샤와機體
兵 力:	110万 5,000 (명)	134万 5,000 (명)
戰術空軍:	2,325 (台)	3,460 (台)
海 軍 力:		
攻擊航母:	10 (隻)	0 (隻)
對潛航母:	4 "	2 "
巡洋驅逐艦:	6 "	15 "
對 潛 艦:	276 "	150 "
어뢰정:	136 "	161 "
核 潛 艦:	33 "	20 "
攻擊潛艦:	120 "	182 " (中・短距離合)
戰 車:	7,750 (台)	21,700 (台)
機 甲 師:	15 (個)	37 (個)
機動步兵師・공성대:	46 "	58 "

※ European Security and Soviet Problems,

ISC Special Report, January 1972, p.33-36.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卽 東西間에는

1. 軍事制度·組織(military structure)上的 差異가 甚심하며 (相互異質性)
2. 裝備·武器體系(equipment & weapon system)面에서 一致하지 아니하며
3. 軍事力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가 異質的이고
4. 諸般 軍事戰略概念이 非類同이며
5. 交渉의 長期化 現象을 안고 있고
6. 政治的 座標定立 卽 政治的 態度決定準備作業이 先決되어야 하는데 東西間의 政治目的과 基本立場의 共通広場마련의 定礎作業이 至難課業中の 하나인 때문에
7. 우선은 質的問題보다 量的問題 특히 計量可能한 손쉬운 基準으로서의 「兵力」의 減縮問題가 1次的으로 浮刻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MBFR의 突現成功을 爲한 研究關心으로서 그 方法論·必要性 그리고 軍事的·政治的 惑은 制度的 接近方法이 試圖되는 가운데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는 情形에 있다. (參照 - Mutual Force Reduction in Europe: The Political Aspects, by Christopher Bertram, Adelphi Papers No 84, 11SS, London, 1972).

뿐만 아니라 軍備協商交渉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은 技術的 原則論上·그리고 基準設定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운 點이 介在하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러나 「政治的」인 与件造

成이 先行·先決하고 또 總體的인 意味의 「戰略的 均衡」이 計算可能한 경우에는 軍備協商·交渉은 意外로 進展될 可能性을 多分히 內包하고 있는 일임을 注意해볼 必要도 있다. (參照 -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trategic Parity, by Walter Slocombe, Adelphi Paper No 77, ISS, London, 1971 May.).

그런데 尙차 南北韓의 基本關係條約 및 平和協定 或은 韓半島의 戰爭狀態 終結을 爲한 어떤 형태로든지의 制度化措置가 整備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軍備協商課業은 南北韓間의 軍事關係의 安定基調를 다지는 南北共通基本要素로서 1次的으로 提起되는 問題이며 韓半島를 둘러싼 周辺強大國의 他律的 強要事項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 경우 南北軍備協商·交渉의 主要 이슈는 亦是 計算的 基準設定이 제일 容易하다고 볼 수 있는 「兵力의 減縮」問題가 第1優先하게 될 것이다. 이에 對備하여 方法論의 모색·兵力減縮의 相互心性· 그리고 接近方法의 몇가지 基準을 中心으로 다음에 略述해 둔다. 그런데 南北韓 軍備協商에 臨하는 마당에 있어서 한가지 留意할 일은 韓半島安全과 平和維持의 「先保障 後軍縮」原則을 貫徹한데 對한 基本政策方向이 定立되어야 한다는 點인 것이다. 「先保障」對策에 있어서는 4大強國의 政治的·戰略的 意味의 對韓半島 平和·安全을 爲한 責任保障을 爭取하는데 活動力點을 두는 일이겠고. 「後軍縮」問題는 上記와 같은 政治的·戰略的 韓半島 局勢造成의 成熟度에 基盤하여 南北韓間의 軍事安定을 爲한 政治·經濟·軍事上의

戰略的 및 技術的 實務的 問題解決의 方向을 모색해 나가는 일인 것이다.

南北軍縮을 위한 協商方法으로 考慮할 때 相對的 意味에서는 基本的으로 北韓과의 直接 會議·協約·妥協·交涉등에 依해서 이루어지는 「雙方合意」(Mutual agreement) - 勿論 「約束은 遵守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原則을 前提함은 勿論이다 - 에 依한 「二邊·雙務的」(bi-lateral) 方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各自己의 獨特한 實情에 알맞는 「自己的 必要」에 依해서 軍縮할 수 있는 이른바 「一方的 獨自裁量」(unilateral + sui generis) 方法이 있는 것이다. 前者의 경우 即 「二邊·雙務的」 方法에 依한 軍備協商의 合意成功例는 之間에 있었던 (72年 12月) 美·蘇間의 SALT 協定이 典型的인 보기이며 後者 即 sui generis 方法의 경우는 世界 各國의 建軍政策 一般이 그러하지만 특히 美國이나 蘇聯의 경우에 볼 수 있드시 雙方이 交涉에 依한 合意는 없으면서도 自國의 獨自의 政治的 經濟的 및 軍事科學技術上의 諸般 形편을 勘案하여 地上兵力 水準을 減縮再調整한다든지 或은 海外派兵力 및 國內外 基地減縮·閉鎖등을 斷行하는 일, 그리고 動員體制의 自己調整·制度修正(가령 徵兵制에서 志願制로 또는 服役年限의 短縮등등)을 實施하는 경우이라 할 수 있다.

確實히 諸國이 直面하는 國防·建軍政策上의 核心은 兵力·武器體系·軍事財政面이라고 볼 때 그중의 한 構成要素인 「兵力問題」는 自國이 最大限度로 國策上 獨自裁量處分할 수 있는 「土着人力資源」

에 依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國內政治的・軍事戰略的 그리고 軍事財政上의 活形便이 許容하는 實情을 감안하여 兵力數의 加減・徵募兵率의 調節・符被兵士・下士官 등의 育成配置比率 및 民間軍屬確保比率를 比較的 自由롭게 政策裁量할 수 있는 分野인 것이다.

(參照 -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Purpose by Erwin Hackel, Adelphi Papers No 72, ISS, London, 1970-Dec.)

그런데 이와같은 人力動員・兵力政策에 있어서 다음에 要領한 集計表가 말해주는 바와같이 世界의 35個國의 總兵力保有水準은 總平均하여 (特定國의 例外는 除外) 自國總人口의 約 1%程度를 占하고 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는데 이는 尙차 南北韓의 「兵力波縮」 交涉에 있어서도 基準設定作業에 重要한 參考資料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國 別	總兵力數 (單位：1,000名)	總人口對 兵力構成比 (%)
1. 소련	3,375	1.4
2. 불가리아	146	1.7
3. 체코슬로바키아	185	1.3
4. 동독	131	0.7
5. 헝가리	103	1.0
6. 폴란드	274	0.8
7. 루마니아	179	0.9

國 別	總兵力數 (單位：1,000名)	總人口對 兵力構成比 (%)
8. 서독	481	0.8
9. 그리스	157	1.7
10. 룩셈부르크	0.55	0.2
11. 노르웨이	36	0.9
12. 포르투갈	218	2.2
13. 터키	449	1.2
14. 알마니아	35	1.5
15. 오스트리아	47	0.6
16. 에이태	10	0.3
17. 핀란드	40	0.9
18. 스페인	301	0.9
19. 유고슬라비아	229	1.1
20. 알제리아	60	0.4
21. 에집트	325	0.9
22. 이란	191	0.6
23. 이라크	102	1.0
24. 이스라엘	25	0.8
25. 조르단	69	2.8
26. 레바논	14	0.5
27. 리비아	25	1.2
28. 모로코	53	0.3

國 別	總兵力數 (單位：1,000名)	總人口對 兵力構成比 (%)
29. 오만	6	0.8
30. 사우디아라비아	40	0.5
31. 수 단	36	0.2
32. 시리아	112	1.7
33. 튀니시아	24	0.5
34. 에초니아	44	0.2
35. 가 나	18	0.2
36. 로테시아	5	0.1
37. 소말리	13	0.5
38. 남아프리카	17	0.1
39. 탄자니아	11	0.1
40. 우간다	12	0.1
41. 콩 고	50	0.2
42. 아프카니스탄	84	0.5
43. 오스트랄리아	83	0.7
44. 버어마	149	0.5
45. 대 만	500	3.4
46. 인 도	960	0.2
47. 인도네시아	317	0.3
48. 일 본	260	0.2
49. 캄보디아	205	3.5

国 別	總兵力数 (單位：1,000名)	總人口對 兵力構成比(%)
50. 북 한	402	2.8
51. 한 국	635	2.0
52. 라오스	74	2.4
53. 말레이아	50	0.5
54. 몽골리아	29	1.9
55. 뉴질랜드	13	0.4
56. 파키스탄	395	0.8
57. 비올빈	31	0.1
58. 싱가포르	17	0.8
59. 셀 룬	13	0.0
60. 태 국	150	0.4
61. 월 맹	513	2.2
62. 월 남	503	2.6
63. 아르헨티나	135	0.6
64. 볼지비아	22	0.4
65. 브라질	198	0.2
66. 칠 레	48	0.5
67. 콜롬비아	63	0.3
68. 쿠 바	108	1.3
69. 도미니칸 공화국	16	0.4
70. 에꾸아도르	20	0.3

国 別	總兵力數 (單位：1,000名)	總人口對 兵力構成比 (%)
71. 멕시코	73	0.1
72. 파라과이	14	0.5
73. 페 루	54	0.4
74. 부루카이	16	0.5
75. 베네주엘라	34	0.3
76. 영 국	376	0.6
77. 캐나다	92	0.4
78. 미 국	3,298	1.6
79. 벨지움	93	0.9
80. 불란서	489	0.9
81. 화 란	121	0.9
82. 덴마크	43	0.8
83. 이탈리아	413	0.8
84. 스웨덴	628 c	7.8
85. 스위스	656 c	10.4
Total	90,395	1.06 (%)

※ c = 「스웨덴」과 「스위스」의 경우는 總動員時의 公式兵力

數이며, 平時現役兵力數는 :

스웨덴	約 82	約 1.0 %
스위스	約 27	約 0.4 %

SOURCE: 이 表는 1972-73 MILITARY BALANCE 에서 彙計하여 國別·總人口·總兵力·總人口對兵力構成比를 檢算作成했으며, ADELPHI PAPERS No72 (MILITARY MANPOWER AND POLITICAL PURPOSE by Erwin Hackel), ISS, London, 1970, P.4. Table I 에 依拠하여 作成했다.

上記表에서 北韓의 경우는 總人口對 兵力構成比가 約 3%인데 韓國은 2%이다. 이를 各 1%線으로 출인다면 南北의 均衡兵力 數字는 自動적으로 計算되는 것이다.

다음은 南北軍縮協商·交涉具現의 必要性 與否이다.

한마디로 政治的·經濟的·軍事的 理由때문에 南北의 軍縮實現은 南北韓에 共通된 必要性을 안고 있다. 對內的 必要性은 主로 經濟的 軍事的 理由때문이며 對外的 必要性에 있어서도 軍援의 制約 軍事財政能力의 非獨立性, 그리고 強大國의 對韓半島 戰略概念上的 要請事項때문에 南北軍縮協商交涉은 前進的 政策態度를 取하는 것이 必要하게 되었다.

勿論 MBF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南北軍縮會談을 通해 合理的으로 定立·處理되어야 할 一般的 考慮要素나 戰略的 考慮事項은 간단하고 容易한 일은 아니다. 問題點으로서는 가령

1. 軍事組織·編制樣式의 基本的 異質性問題 即 國軍組織과 人民軍組織·編制上的 相異性은 調和基準을 創出하기란 至極히 困難한 課題中的 하나다.

2. 韓國의 美國武器體系·北韓의 中蘇·基本的으로는 蘇聯武器體系間的 不一致問題인데 이 武器體系間的 均衡 基準創出問題도 간단치가 않다. 一例로 北韓의 中·小型 高速艦艇類는 美國의 普遍화된 武器體系가 아닌 것을 想起할 수 있다.
3. 軍隊組織의 下部構造 특히 政治思想 幹部化問題 黨軍性格 등 國軍과 人民軍組織·運用·編制間的 異質性은 엄청나다.
4. 戰略概念·軍事敎理 등 諸般局面에 있어 同質性을 찾기 힘들다.
5. 協商·交談合意過程은 長期化될 性격을 지니고 있다.
6. 戰術戰法·訓練敎育上的 異質性도 問題點의 하나이다.
7. 國防予算編成·構造上的 特徵도 非同質類型이라는데 問題點이 심각하다.

其外에도 平和維持相互監視機構·查察方法·軍需產業問題 등 등 突로 軍備縮少協商 成就作業이란 至難한 國家事業임에 틀림이 없다.

(參照 - 「軍縮會談에서의 戰略的 考慮」·研究論叢 第19号, 1972年9月·德東問題研究所刊·第2編所収「社」項 題下)

다음은 南北軍縮協商·交涉을 爲한 接近方法을 軍事的·政治的·制度的 側面에서 試論하고 이 論文을 代들하겠다.

먼저 軍事的 接近方法에서는

1. 南北韓 長期軍事安定上 均衡兵力維持의 政治的 必要性이 大前提되어야 하며
2. 裝備武器體系의 「均衡의 現狀凍結」- 가령 國軍現代化計劃의

早期目標完結같은 것 - 이貫徹되어야 하고

3. 防衛負擔(軍事財政)을 遞減할 수 있는 變務的 方法이 모색되어야 하며
4. 「先保障後軍縮」原則을 實現할 수 있는 南北共同努力과
5. 共同查察·合同監視制의 協定·合意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6. 兵力減縮上의 均衡基準 定立·合意가 必擧한 것인데 이 경우 總人口能力對 兵力構成比를 勘案하는 것이 合理的인 方法의 하나이다.

다음은 政治的 解決接近方法이다. 南北 雙方은 彼此的 軍事力이 相互關係의 政治的 安全保障機能의 担保임을 諒解하고 어디까지나 無限定한 競爭的 對決姿勢 보다는 「互惠的 安保概念」을 導入創出하는데 共同努力의 核心을 集中해야 하며 이를 爲하여

1. 實質的 緊張緩和를 爲한 軍縮協商·交涉의 巨視的·長期的 方向感覺을 設定해 주어야 하며
2. 兵力均衡策 모색에 있어서 可及의이면 uni-lateral + sui generis 原則을 相互尊重해 줄 수 있는 方案이 創出될 것이 바람직 한데
3. 政治的 接近方法은 軍事的 接近方法보다 훨씬 Flexible (flexible)할 수 있는 餘유가 있음을 最大로 發動 勘案하여
4. 兵力水準·軍事基地·兵力移動·監視查察·軍事演習·軍事代表

相互交流 및 軍事科學技術情報交換 등등의 諸般問題에 걸친 巨視的 伸縮性原理를 살려나가는 方向指針을 定立해 주는 데 있는 것이겠다.

끝으로 制度機構上的 接近方法을 略記하겠다. 이 方法은 軍縮實現의 軌道役割을 担当하는 方法으로 看做할 수 있다.

雙方的 協定の 締結이나 또는 地域安保會議體構成 乃至는 集團의 安保措置機構의 創設을 통한 方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方法論을 取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關係強大國에게 實質的인 協定遵守 및 平和維持를 保障하는 共同監視責任을 賦果하므로써 軍事安定·均衡維持의 實効를 거둘 수 있는 方法의 하나이다.

制度·機構上的 接近方法은 雙方立場間의 意見膠着을 打開해 줄 수 있는 「채널」로서 機能할 수 있으며 특히 軍備協商에 있어서 最大難關으로 봉착하는 것이 常例인 「相互監視·共同查察保障」의 機能을 現實的 方法으로 擴大圖謀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 것이 別度·機構上的 軍縮協商接近方法이다.

要컨대 強大國에 依한 集團의 共同保障없는 現今의 群小國間의 軍備協商協定은 現實적으로 無意味할 뿐만 아니라 向後의 70年代 全設을 통해 보더라도 軍備의 相互規制를 爲한 制度與件이랄 수 있는 共同監視·查察保障」措置를 取하는데 失敗한다면 世界는 다시 軍縮協商이 아니라 새로운 軍備競爭 및 軍事「블럭形成의 修羅場이 될 潛在要因을 充分히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南北韓의 軍備協商問題는 問題 그 自体로 보면 「軍事的」인 性格의 것인데도 問題解決의 關鍵的 方向設定은 「政治的」方法에 依해 處理되는 것이 「現實的」이라는 問題意識의 把握을 藥約해 주고 있다고 할만 하다. 그러기 때문에 今世紀의 「地上平和」(pacem in Tercis)는 樂觀과 悲觀의 半半展望속에 있으며 人類는 尙상 戰爭과 平和의 岐路에서 서성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